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2026 ~ 2035]

2025. 12.

국 토 교 통 부

||| 목 차 |||

I. 계획의 개요	1
II.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9
III. 계획의 기본 방향	32
IV. 특구별 조성·육성 및 초광역권 활용 방향	42
V. 사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70
VI. 운영 및 성과 평가 방안	78
VII. 기대효과 및 미래상	85
[참고] 범부처 협력사업 목록	87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 도심융합특구 추진 배경

- 그간 정부는 광역경제권(5+2 등), 혁신도시, 도시재생 등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세종시, 혁신도시가 본격 조성된 '10년 초중반까지는 수도권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되는 등 성장거점 정책 효과* 확인
 - * 혁신도시는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역전시점을 8년 늦췄다고 평가(국토연구원, '20)
- 그러나 인구·경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및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성장을 견인할 거점 마련 시급
 - 수도권 인구 비중은 51%, 청년 인구 비중은 55%에 도달
 - * 수도권 인구 비중 : '95(45.1%) → '05(48.1%) → '15(49.4%) → '24(50.9%)
 - ** 청년 수도권 비중 : '95(46.2%) → '05(50.2%) → '15(51.8%) → '24(55.0%)
 - 최근 10여 년간 수도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4%, 국가 경제 성장 기여율은 60.3%로 지방을 압도하는 경향
 - * 연평균 경제성장률 : 금융위기 이전('00-'07)은 수도권 5.4% vs. 비수도권 4.9% (격차 0.5%p) → 금융위기 이후('10-'21) 수도권 3.4% vs. 비수도권 1.9% (격차 1.5%p)
 - ** 국가 경제성장 기여율 : 금융위기 이전('00-'07)은 수도권 51.3% vs. 비수도권 48.7% → 금융위기 이후('10-'21) 수도권 60.3% vs. 비수도권 39.7%
 - 반면, 비수도권 시군구(162개)는 소멸위험지역이 75%(121개)에 육박
 - * '24.3월 기준, 비수도권 시군구 162개 중 소멸위험지역은 121개
 - 금융위기와 국가적 저성장,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수도권은 新산업 육성과 청년·기업 유인을 위한 새로운 거점 육성 필요 대두

- 또한 정부는 지역발전과 혁신을 위해 예외적 권한·혜택을 부여하는 다양한 특구를 지정·운영 중이나, 광역·기초 단위로 난립 경향
 - 과거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낙후지역 위주로 지정했었으나, 최근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도시권내 지정 사례 증가(관계부처 합동, '25.2)
 - 현행 특구는 부처 단위로 운영되어 인센티브 효과가 저하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창출에도 한계가 있어 선순환이 어려움
 - * 현재 87종 2,437개 특구가 운영 중으로 단계적 통합 정비 필요(국정기획운영위, '25)
 - 향후 국토의 거점-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고려하면 초광역권 및 대도시·거점(교통결절점) 중심으로 특구간 기능 결합과 연계 중요
- 이에, 지역성장 견인을 위해 입지 여건이 우수한 지방 주요 도시 도심에 성장·혁신 공간 플랫폼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추진
 - 특구 간 통합·연계의 틀로 기능하여 초광역권 차원에서 기능 중복 최소화와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혁신생태계의 집적 거점 역할 수행

□ 도심융합특구 도입 개념(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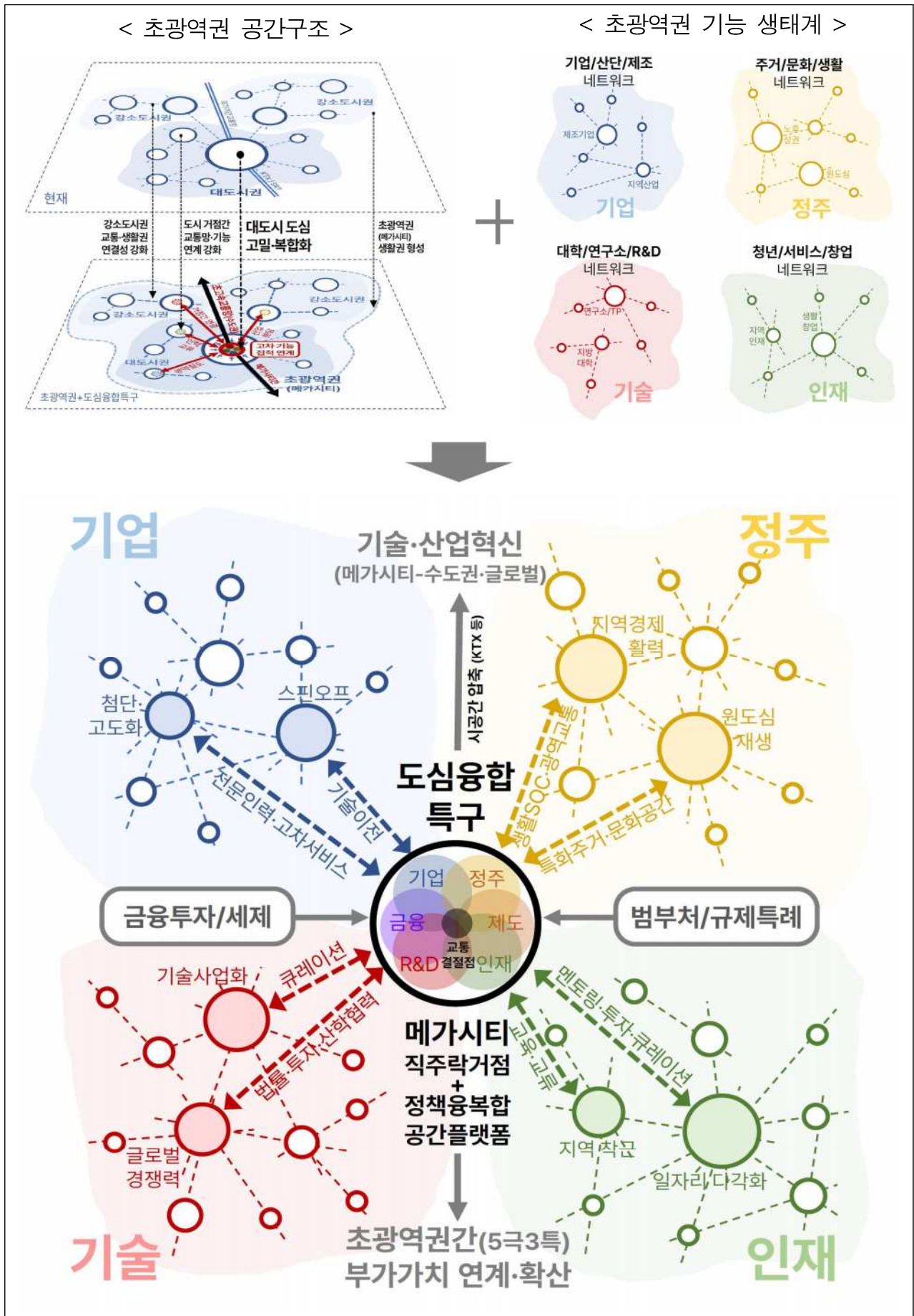
-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에 대응하여 다극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성장거점-네트워크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구심점
 - 중추도시(대도시권)에 도심융합특구를 구축하여 경제거점의 위상을 회복하고 거점도시(혁신도시 등)와 연계로 자립역량 강화
 - 도심융합특구는 초광역권 거점으로서 작지만 효과가 큰 '지역혁신 생태계의 스몰빅(Small-Big) 성장거점'으로 기능하며 일자리·인재가 찾는 매력적 융합 공간과 스마트 공간으로 조성
- 이를 위해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

- 도심에 산·학·연·관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공간을 조성하여 혁신기업·미래인재를 유치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
- 지방 대도시 도심 내 기술·기업·인재 집적을 위한 공간플랫폼, 지원프로그램, 협력체계*를 패키지로 구축하고, 과거 단일·파편적 개발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통합적 지역 거점 형성
 - * 산(産) : 수도권 앵커기업 유치, 지역 유망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스케일업
 - * 학(學) :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 지역혁신사업 등과 기능적 연계 강화
 - * 연(研) : 기업 R&D 센터, 첨단기술기업 등 유치, 기술개발, 실증사업 지원
 - * 관(官) :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연계 및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
- (도심 내 공간플랫폼) 범정부 사업 결합 및 집중, 기업·인재 육성·일자리 제공 사업을 유치하여 정부의 마중물 역할 수행
- (지원프로그램 패키지) 통합 지원 패키지 마련 및 세제·재정 등 금융 지원으로 국내·외 글로벌 기업 유치 및 투자 유도
- (단계별 협력체계 구축) 정책단계별 추진 협력체계 및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여 초기 사업에의 속도감과 사업 추진 역량 확보

< 도심융합특구 도입 개념(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20.9) >



□ 도심융합특구 추진 개념



□ 그간 도심융합특구 추진 경과

-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방안 발표('20.9)
- 5대 광역시의 제안을 받아 선도 사업지 선정('20.12~'22.12)
 - * 선도사업지 선정 : '20.12(대구, 광주) → '21.3(대전) → '21.11(부산) → '22.12(울산)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융합특구법」)이 제정('23.10)되어 시행('24.4)
-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한 특구지정 및 기본계획을 승인('24.11)하여 사업에 본격 착수함

□ 종합발전계획 수립 배경

- '24년에 「도심융합특구법」 시행으로 도심융합특구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필요
 -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별 특구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발전 방향 제시
 - 부처별 지원·연계사업을 패키지화함으로써 사업 실효성을 제고
- 향후 10년 동안 특구 조성에 대한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계획 마련

2. 계획의 위상과 성격

□ 계획의 위상

-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 「도심융합특구법」에 근거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국가 정책방향과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공
- * 종합발전계획은 '종합발전계획-기본계획-실시계획-운영계획' 중 최상위 계획
- 법정계획과 국가 정책으로서 위상을 갖는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도심융합특구의 비전, 목표, 계획의 실행방향 정립
-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특구별 하위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연계계획의 역할을 제공
 - 개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 계획의 성격

- 도심융합특구의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10년간) 전략과 단계적 추진 방향 제시
- 특구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여러 부처의 역량과 자원, 지원 체계를 한데 묶은 통합 지원 프로그램 제시
- 정부-지자체-사업자 간 추진 거버넌스와 실행력을 갖춘 운영·조정 기능, 재정지원 수단 제시로 기관 간 협업을 위한 핵심 틀 제공
-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이고 단계별 추진 전략과 도심융합특구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운영·성과관리 기준 정립
- 실제 사업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지속가능한 운영·지원·관리를 위한 전담조직(특구재단 등) 운영의 근거와 방향 마련

3. 계획의 방향과 원칙

□ 계획의 방향

- 도심융합특구가 지역의 혁신·일자리·정주 거점 형성을 선도하는 길잡이로 새로운 국가균형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와 광역권간 '공존동생'을 위해 국토의 다극 네트워크 체계 형성을 지원할 특구의 역할 제시
 - 도심융합특구의 미래 비전과 발전목표를 구체화하여 미래 국토의 균형발전과 초광역권의 다극 연계체제(5극3특) 구축 선도
 - 도심융합특구를 통해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촉발하고, 거점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으로 연결되는 초광역권 형성 지원
- 도심융합특구의 조성·발전을 위한 전략과 사업 방향 구체화
 - 지방 대도시 도심이 기업·인재가 집적하는 성장·혁신의 공간 플랫폼이자 인구·일자리 댐으로 기능할 방안 구체화
 - 비수도권에 일자리와 인재가 유치되고 거점도시의 잠재력을 발현하여 혁신·일자리 생태계를 일궈나갈 전략 마련

□ 계획의 원칙

- 도심융합특구가 ❶균형성장·혁신과 ❷초광역권 거점 형성, ❸직·주·락 융복합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정책·사업 통합 패키지화
- ❶ (균형성장·혁신 지원) 비수도권의 경제·사회·문화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인재·인프라·S/W의 집적·복합화
 -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기업·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공간을 집중투자로 조성
 - 창의인재 육성, R&D 지원, 투자 유치 등을 결합한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H/W + S/W + O/S를 통합

- ② (초광역권 거점 형성) 초광역권 단위로 산업·혁신 기능의 연계와 융합을 위한 거점을 제공하고 광역교통망 연계로 메가시티화 지원
 - 전 국토가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압축과 연결되고 지방 대도시의 집적과 연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플랫폼 제공
 - 국토 균형성장을 위한 범부처 협업과 유관 정책·사업을 특구에 통합·연계하여 패키지와 전주기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③ (직·주·락 융복합 플랫폼) 고밀도 혁신공간과 개방적이고 유연한 협력 기반으로 기업·인재를 유인하고 지방의 삶의 질과 품격 제고
 - 혁신 인재와 청년·여성이 선호하는 정주 환경 및 생활·문화공간을 형성하여 기업과 인재의 비수도권 정착·성장을 유도
 - 지방 대도시 도심이 가진 산업 교류, 정주·여가 기반, 교육 접근성 등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하여 삶의 질과 품격 제고

4.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5년(10년)

*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경 가능

☐ 공간적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심융합특구 지역과 도심융합특구로서 지정이 가능한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

☐ 내용적 범위

- 비전·목표에서부터 실행·지원 방안까지 전 분야를 포괄
 -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도심융합특구의 운영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Ⅱ.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1. 국내 현황 및 여건

①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인구 감소·고령화 심화와 지방 위기 확대

○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이며, 생산가능 인구는 '50년에는 2,445만명으로 '20년 대비 34.6% 감소 예측

- 총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50년 52%로, '00년 대비 27.5% 감소*할 것으로 보여 노동생산성 감소는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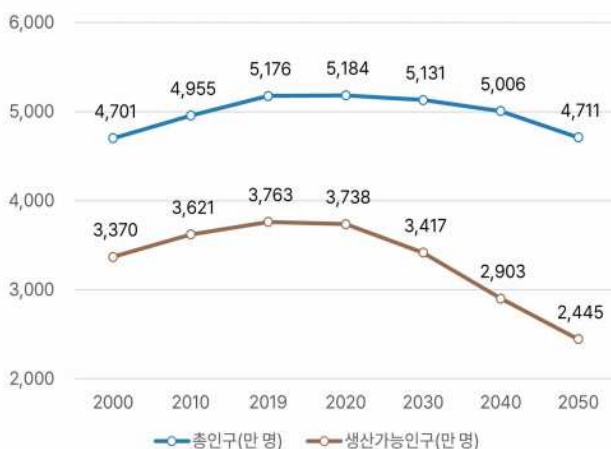
* 총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 : 71.7%('00) → 72.1%('20) → 51.9%('50)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나, 지방 소멸 위기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수도권 74.1%('20) → 53.9%('50) vs. 비수도권 70.1%('20) → 47.8%('50)

** 소멸위험지역(시군구) : '00(0개) → '10(61개) → '20(102개) → '24(130개)

< 총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추이('00~'50) >



<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수('00~'24) >



자료: (좌)통계청(<https://kostat.go.kr>, <https://kosis.kr>). 2023. 「장래인구추계」 주요 인구지표/전국^{주1)}, ^{주2)}

(우)이상호·김필(한국고용정보원). 2022.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

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 2024.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

주 1) 2023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로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

2) 1960~2022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3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 인구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 인구 비중 확대에 영향을 받음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2년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 OECD 합계 출산율('22) : 한국(0.78), 스페인(1.16), 이탈리아(1.24), 일본(1.26), 캐나다(1.33), 독일(1.46), 영국(1.53), 호주(1.63), 미국(1.67), 프랑스(1.79) (OECD, '24)

- 고령화지수는 '24년 12월 20.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

*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

○ 출산율 저하, 고령 인구 비중 확대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역의 총부양비 증가를 초래

* 지역 총부양비는 '12년 36.2%에서 '50년 92.7%까지 상승 전망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및 < 생산가능인구비 및 총부양비⁽⁴⁾ 추이('00~'50) >
합계출산율⁽³⁾ 추이('00~'30) >



자료: 통계청(<https://kostat.go.kr>, <https://kosis.kr>). 2024. 「장래인구추계」, 주요 인구지표/시도⁽¹⁾, ⁽²⁾
통계청(<https://kostat.go.kr>, <https://kosis.kr>). 2023. 「장래인구추계」, 주요 인구지표장래 합계출산율/전국⁽³⁾, ⁽⁴⁾

- 주 1) 2024년 5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로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
2) 1970~2022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3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3) 합계출산율: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4)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5) 2023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
6) 2022년까지는 인구동태통계 합계출산율 실적치이며, 2023년부터는 장래 출산력 가정에 의한 합계출산율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총부양비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생산성 저하와 저성장 야기

-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피부양 인구* 증가가 큰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장** 저하와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

* 국가의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할 때 국내총생산(GDP)은 0.59% 감소하며,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17% 감소(한국경제연구원, '23)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2050년 국내총생산(GDP) 추정 결과, 2022년 대비 28.4% 감소 전망(한국경제연구원, '23)

□ 비수도권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필요

○ 최근 국가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가 진행

-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고용 비중은 감소**

* 제조업 고용 비중(%) : '95(26.7) → '00(24.0) → '10(19.4) → '20(17.2) → '22(16.9)

** 서비스업 고용 비중(%) : '95(64.9) → '00(70.1) → '10(72.9) → '20(72.7) → '22(73.9)

○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조차 되지 않으며, 이는 주요국 서비스업 생산성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제조업 부문 생산성 : 한국(13.8만 달러) > OECD 평균(11.5만 달러)

** 서비스업 부문 생산성 : 한국(6.6만 달러) < OECD 평균(7.7만 달러)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팬데믹 이후 급락함에 따라 산업 전환이 필요

* 제조업 평균가동률(%) : '95(80.7)→'10(80.4)→'20(71.1)→'24(72.7)(통계청, '25)

○ 따라서, 제조업 의존이 큰 지방의 경우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필요

- 주요 선진국의 생산성 고도화 사례를 참고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지방 경제성장 회복 필요

< 주요국의 산업별 생산성('21) >

단위 : 만 달러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 제조업
대한민국	13.8	6.6	47.5%
G7	영국	12.4	7.5
	일본	10.9	7.2
	독일	11.0	7.6
	미국	16.0	12.8
	프랑스	10.5	8.6
	캐나다	9.5	7.8
	이탈리아	8.9	8.2
G7 평균	11.6	8.3	71.3%
OECD 평균	11.5	7.7	67.0%

< 주요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별 생산성('21) >

단위 : 만 달러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관리지원
대한민국	11.8	17.5	7.3
G7	영국	16.0	21.2
	일본	12.8	14.9
	독일	14.1	14.0
	미국	27.1	20.4
	프랑스	16.3	15.1
	캐나다	10.3	12.8
	이탈리아	12.5	17.9
G7 평균	15.1	16.7	7.9
OECD 평균	18.3	18.0	8.9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23. 「2023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통계DB 주1)

안중기(국회입법조사처). 2025.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

주 1)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실질부가가치 구매력 평가 적용), 2021년 기준 OECD 평균은 튀르키예 호주를 제외한 36개국 평균

주요 선진국들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노력

□ 선진국들은 지방의 첨단 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기술력 강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생산 효율성 제고에 노력 중

① (미국) 국가 전역으로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통해 첨단 제조업과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 강화

* 리쇼어링(Reshoring) : 첨단산업의 자립도를 확보하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내 첨단 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정책(기획재정부, '20)

② (독일) Industry 4.0* 전략을 통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고, 지역에 산재된 제조시설의 스마트 팩토리화 산업 고도화 추진으로 생산 효율성을 제고

* Industry 4.0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산업 내 기계와 공정을 지능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정책(Plattform Industrie 4.0, '25)

③ (중국) 중국제조 2025 정책*을 기반으로 제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최적화 도모

* 제조업의 혁신발전을 촉진하고 질과 효율 향상을 중점으로 하여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추진(KIEP 북경사무소, '15)

□ 청년 인재를 위한 정주·문화 환경 조성 중요

○ 청년세대 종사 비율*이 높은 편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증가** 추세

* 고부가가치 산업 연령별 근로자 비율('24) : 20~39세(50.8%) > 그 외(49.2%)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 '94(10.6) → '24(17.8)(한국은행(정선영 외), '25)

○ 청년 인재를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

*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1년에는 청년 2명 중 1명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가장 중시(통계청, '23)

-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과 삶의 균형은 OECD 최하위 수준*

*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OECD 회원국 대상 비교에서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는 3.8점으로 덴마크(8.6점), 이탈리아(9.4점) 등과 비교했을 때 하위권을 차지(OECD,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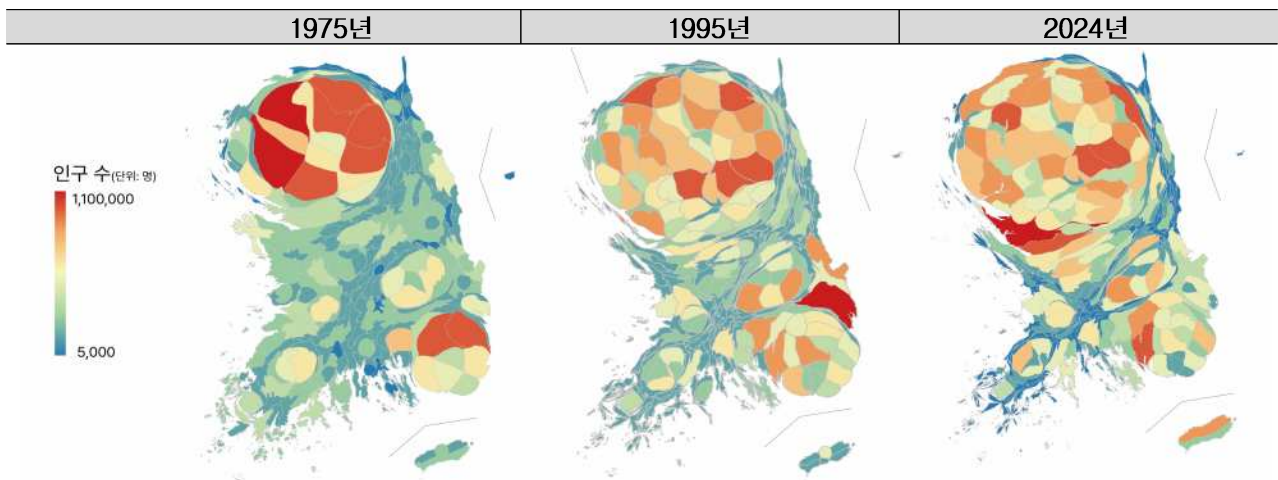
○ 이에,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직장 인근에 고품질의 정주·문화 환경 조성이 필요

2 국토불균형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심화

□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 불균등 심화

-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일부에 인구가 집중되는 국토의 불균등성은 심화하는 가운데 부분적 광역화 현상 발생
-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수도권·영남권의 성장 집중, 국토의 불균등성 가속화와 인구 중심점의 북서쪽 편향 이동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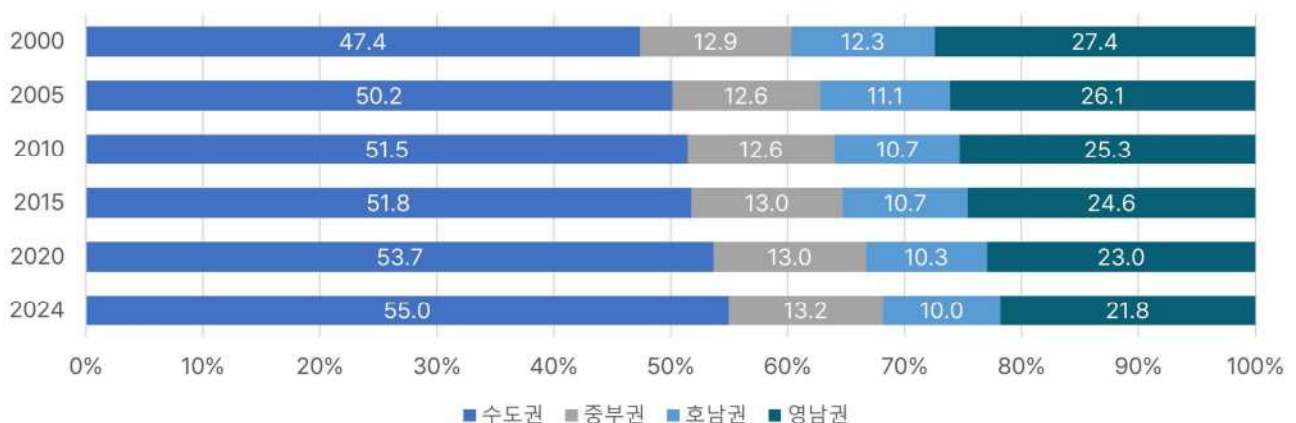
< 전국 인구 변화('75~'24) >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https://kosis.kr>). 2015. 「인구총조사」. 총조사인구(1975년) 행정구역별 인구 및 가구
행정안전부(<https://kostat.go.kr>, <https://kosis.kr>). 2025.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kostat.go.kr>). 2025. 「센서사용 행정구역 경계」, 시군구(1975년, 2024년)

- 특히, 최근 30년간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 청년 인구의 55.0%가 수도권에 거주

< 권역별^{주1)} 청년세대 비중('0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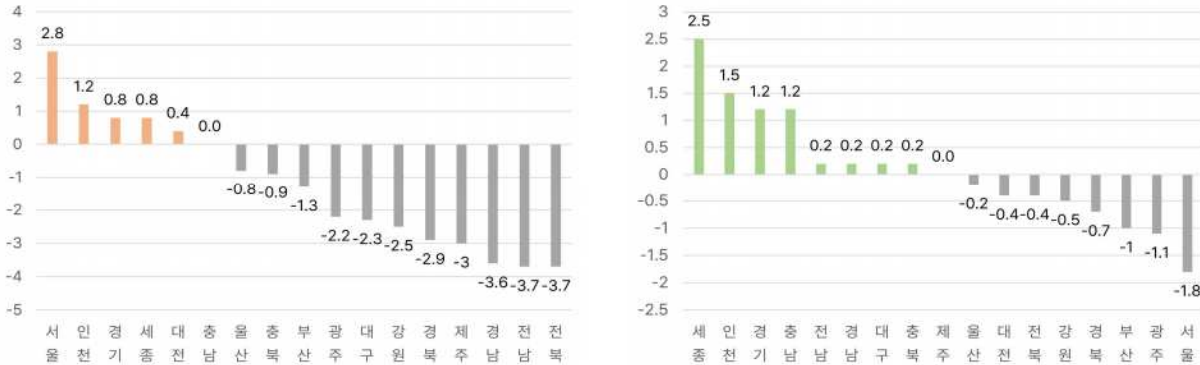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https://gsis.kwdi.re.kr>). 2025. 「주민등록 인구통계」

주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부권(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청년층인 2030세대의 순이동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의 순유출 발생

* 20대 : 서울(2.8%), 인천(1.2%), 경기(0.8%) / 30대 : 세종(2.5%), 인천(1.5%), 경기(1.2%) 순

< 시도별 청년세대 순이동률('24, (좌) 20대, (우) 30대) >



자료: 통계청(<https://kostat.go.kr/>). 2025. 「2024년 연간 국내인구이동(보도자료)」 (저자 그림 가공)

- 청년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에 양질의 교육·일자리 기회 공급이 절실

-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전입의 주된 사유는 일자리, 가족, 교육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경제적 기회비용에 기반

* 수도권 전입 사유 : 직업(35.6%), 가족(27.3%), 주택(16.6%), 교육(8.5%) 순(통계청, '25)

- 이에 지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삶의 만족도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학업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는 환경 조성 필요

<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 비교('22) >



자료: 통계청(<https://kostat.go.kr/>). 2023.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 (저자 그림 가공)
국무조정실. 2023.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 수도권과 지방간 산업·일자리·혁신자원의 격차 확대

○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자본과 노동의 편향 및 수도권의 성장 독점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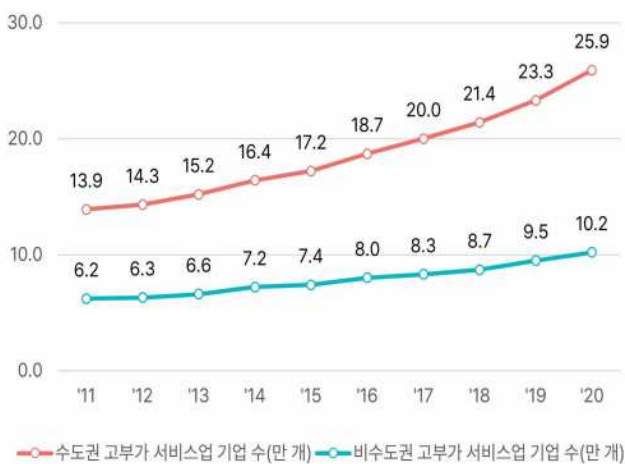
- 고부가서비스업 기업 수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우세한 분포*이며, 전체 규모의 격차 또한 지속 확대되는 경향

* 고부가서비스업 기업 수('20) : 수도권(25.9만 개) > 비수도권(10.2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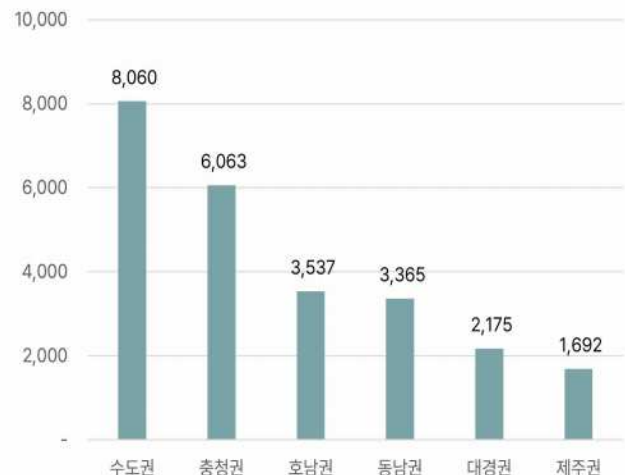
- 특히, 고부가서비스업 창업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최상위 수준으로 수도권 집중 경향

* 인구 백만 명당 고부가서비스업 창업기업 수 : 수도권(8,060개), 충청권(6,063개), 호남권(3,537개), 동남권(3,365개), 대경권(2,175개), 제주권(1,692개)

< 고부가서비스업 기업 수('11~'20) >



< 인구 백만 명당 고부가서비스업 창업기업 수^{주3)}('23) >



자료: (좌) 김천구, 박현준(대한상공회의소). 202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 (저자 그림 가공)^{주1)}

(우)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https://kosis.kr>). 2025. 「창업기업동향」, 지역별·업종별 창업기업수

주 1) 고부가 서비스업: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주민등록 연앙인구=(연초 주민등록인구÷연말 주민등록인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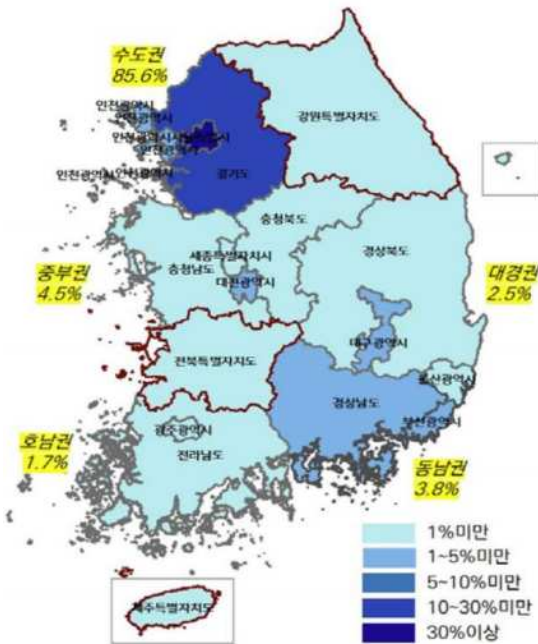
3) 인구 백만 명당 고부가서비스업 창업기업 건수=(고부가서비스업 창업기업 수:주민등록 연앙인구)×1,000,000명

○ 지식기반산업 역시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적도*가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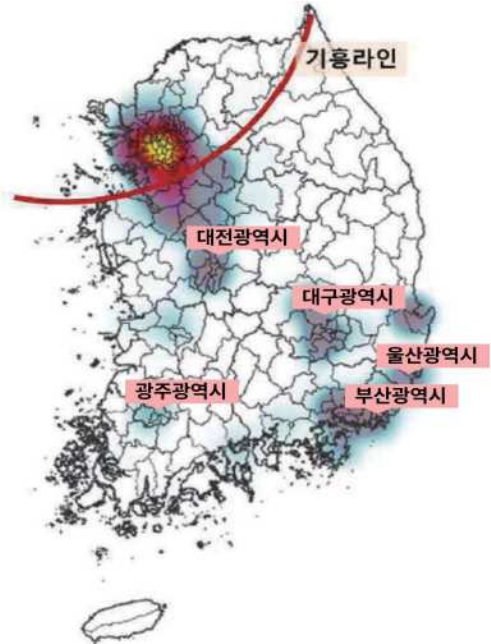
* 지식기반산업 집적도(%) : 충청북도, 충청남도(1.41) > 경기도(1.33) > 인천광역시(1.10) > 세종특별자치시(0.98) > 대전광역시(0.95) > 경상북도(0.95) > 서울특별시(0.89) > 경상남도(0.77) > 부산광역시(0.69)(NABIS(산업연구원), '23)

- 고부가·지식기반산업과 기업의 수도권 편중은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쳐, 수도권 집중과 기흥 이남 지역 기피 현상 초래

< 첨단지식서비스업 비중('23) >



< 엔지니어 공간 분포('19) >



자료: 국토연구원(유현아·조은주). 2025. 「5극3특 실현을 위한 초광역권과 특구 제도의 연계방향」
국토연구원(조성철 외). 2020. 「밀레니얼 청년세대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향」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는 고용과 임금의 격차*로
이어져 지역 간 청년 일자리의 질적 격차가 심화되는 경향

- *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 고용률 격차 5.8%p, 명목임금 격차 14.1%p('22년 상반기)
- * 지역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움(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외), '24)

<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고용률 차이(% p) >



< 수도권/비수도권 명목임금격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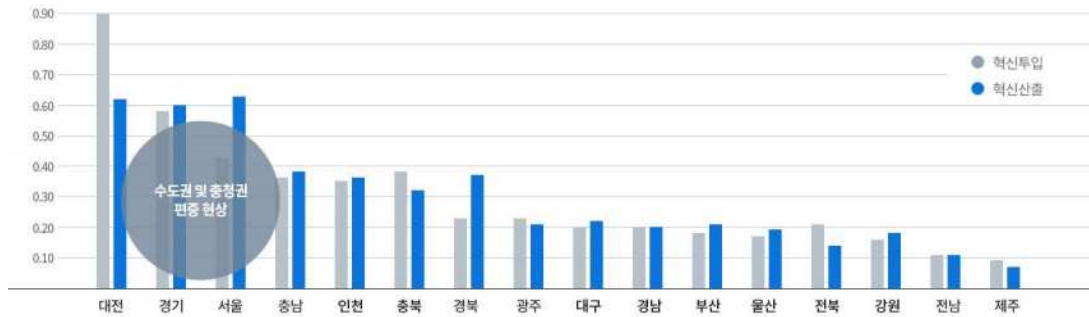
자료: 이상호·이지은·노대영(한국고용정보원). 2024.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저자 그림 가공)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13~2022년 각 연도 상반기 자료

○ 또한, 대학과 연구개발비 등 혁신자원도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어 대전·충남 외 지방의 혁신 창출 역량 저하를 초래

- 수도권과 대전의 혁신투입*과 혁신산출**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혁신산출 지수는 수도권의 절반 이하 수준

* 혁신투입 : 인적자원, 지식창출 등 ** 혁신산출 : 지식재산권, 혁신활용 등

< 시도별 혁신지수(21) >



자료: NABIS(<https://www.nabis.go.kr>). 2020. 「지역혁신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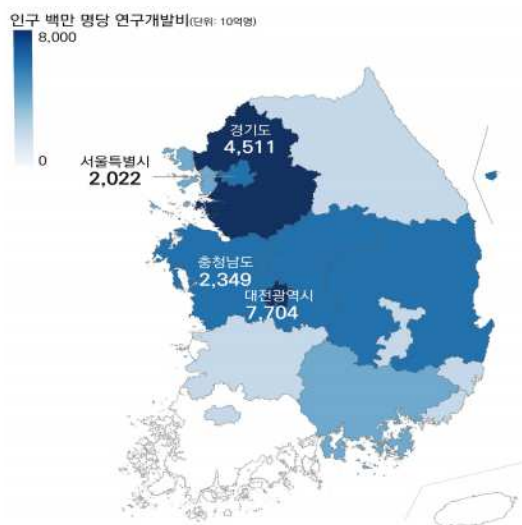
- 혁신투입 중 인구 백만 명당 연구개발비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

* '23 인구 백만 명당 연구개발비(10억원) : 대전광역시(7,704) > 경기도(4,511) > 충청남도(2,349) > 서울특별시(2,022) > 세종특별자치시(1,939) > 충청북도(1,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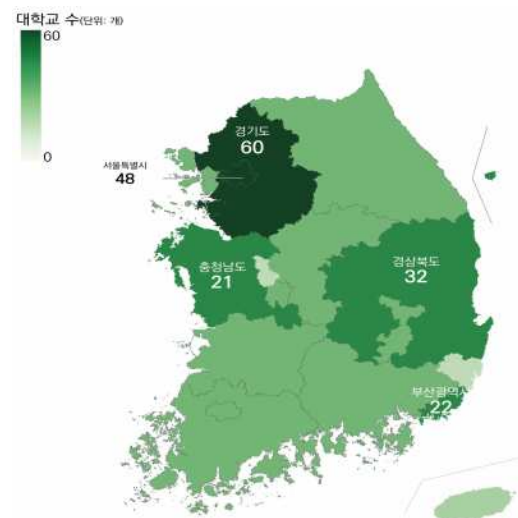
-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등교육 인프라 분포

* '24 지역별 대학교 수(개) : 경기도(60), 서울특별시(48), 경상북도(32), 부산광역시(22)

< 인구 백만 명당 연구개발비(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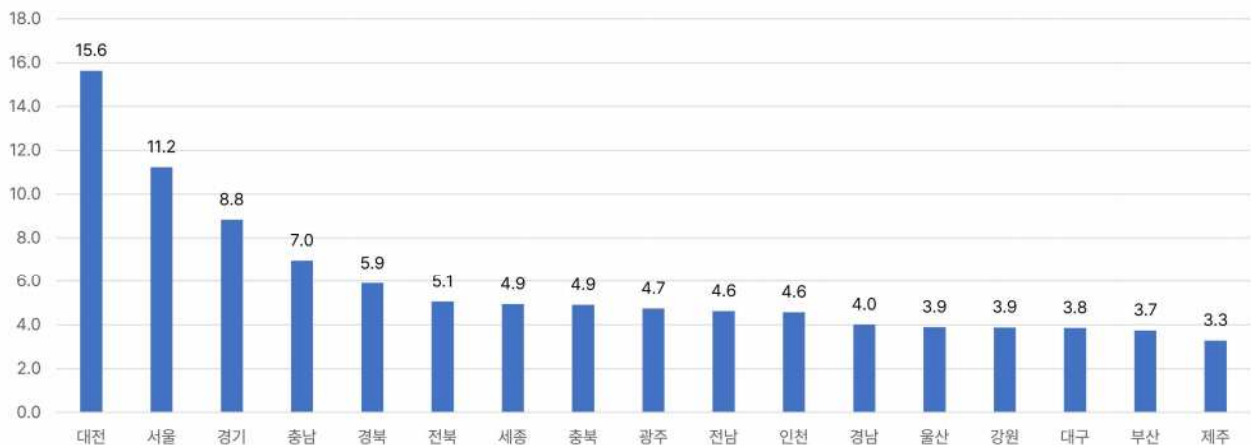
< 전국 대학교수(24)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2024. 「연구개발활동조사」 지역별 연구개발비
한국교육개발원(<https://www.kedi.re.kr>, <https://kosis.kr>). 2024. 「대학교 수(시도/시/군/구)」
V-WORLD(<https://www.vworld.kr>). 2025. 「센서스경계」 시도경계

- 반면 대전의 경우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연구기관 집중으로 경쟁력 있는 혁신역량을 여전히 보유 중으로 지방의 혁신 성장 가능성 상존
- '23년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비율은 대전(15.6%)이 서울(11.2%), 경기(8.8%)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
-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대학(KAIST) 등 혁신 거점이 도시에 집적 입지하여 지방의 혁신 잠재력 확보가 여전히 가능함을 시사
- 이에 지방 경쟁력 확보와 혁신역량 확충에는 혁신자원의 집적과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공간 조성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

<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수('23)^{주2)} >



자료:특허청(<https://www.kipo.go.kr>, <https://kosis.kr>). 2024. 「지식재산권통계」 특허출원건수(시도)
 통계청(<https://kostat.go.kr>, <https://kosis.kr>). 2024.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주1)}
 주 1) 주민등록 연앙인구=(연초 주민등록인구÷연말 주민등록인구)÷2
 주 2)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특허 출원 건수÷주민등록 연앙인구)×1,000,000명

□ 혁신 인재 지방 정착을 위해서는 정주·문화 환경 조성이 관건

- 청년 유입·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 외에도 정주 및 생활·문화 인프라 완비와 품격 확보가 중요
- * 2030 비수도권 거주 의향 결정 요인 :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여건(41.2%) >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29.8%) >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 (26.5%) (대한상공회의소 '24)
- 특히 지방의 경우 청년 유입·정착을 위해 교육·일자리와 함께 양질의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 확충, 다양한 교류 공간 확보가 필수
- * 수도권 구직 청년들의 비수도권 근무 기피 이유 : 인적 네트워크 부족(60.7%) > 생활·문화 인프라 열악(59.8%) > 주거·생활비 부담(48.9%)(대한상공회의소, '22)

3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권 거점-네트워크 본격화

□ 지방의 광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메가시티(5극3특) 추진

○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성장의 핵심체계로 초광역권 '5극3특' 전략 본격화

- 수도권 집중, 지역산업 위기, 인구구조 급변의 3중고를 겪는 국가의 균형성장을 위해 자치분권 기반의 메가시티(5극3특)* 추진

* 메가시티(megacity) : 1,000만 명의 대도시가 아니라 권역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공유하는 공간정책 프레임워크 중 하나를 의미(국토연구원, '24)

* 5극3특 : 5극은 5개의 초광역권으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충청 지역의 중부권, 호남권을 말하며 3특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의미(대한민국 정책브리핑(김효정), '25)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2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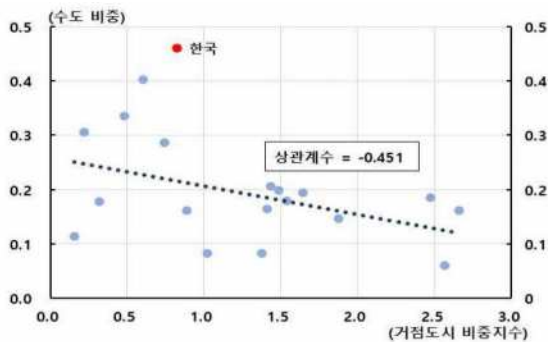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25.8(그림: 중앙일보(전진우), 2025.8.22.)

-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메가시티 거점 육성*은 수도권 팽창을 견제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효과적인 전략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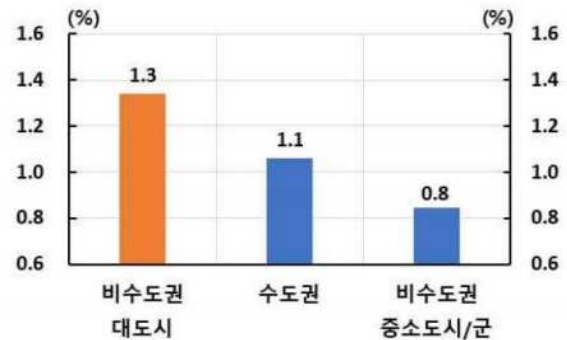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지역구분(FUA) 기준 거점도시 비중지수는 하위권으로 거점도시들의 비중이 지금보다 커져야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국은행(정민수 외), '23)

** 생산성 1% 개선 시 국가 평균 GDP 효과를 통해 수도권 위주의 생산성 개선보다 비수도권 중소도시·군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국은행(정민수 외), '24)

< 거점도시 비중지수¹⁾와 수도 비중 >



< 생산성 제고의 전국 GDP 효과²⁾ >



자료: 정민수 외(한국은행). 202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 OECD(<https://www.oecd.org>)

정민수 외(한국은행). 2024.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주 1) 지역구분(FUA)이 5개 이상인 21개 국가 기준이며 거점도시 비중지수가 각각 56, 64인 일본, 미국은 그림에서 제외

2) 시도별로 생산성 1% 상승 시 GDP 효과를 도출한 후 비교를 위해 규모효과 조정

- 국토공간을 거점-네트워크 체계로 대개조함에 있어 초광역권 형성의 앵커가 되는 지방 대도시 성장·혁신거점으로 육성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지방 대도시의 거점을 활용하여 광역적 기능 연계와 발전의 기틀 형성*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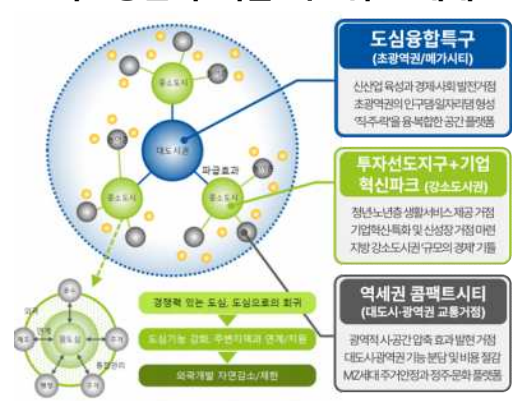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방향 : 저성장, 축소시대에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 비수도권 도시기능을 중점 지역으로 집약시키고, 여러 도시가 이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 강구

< 국토공간체계 기본구상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 「제5차 국토종합계획」

< 국토공간의 거점-네트워크 체계 >



자료: 김현수·마강래·서민호(2022)

일본의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 “대류 촉진 국토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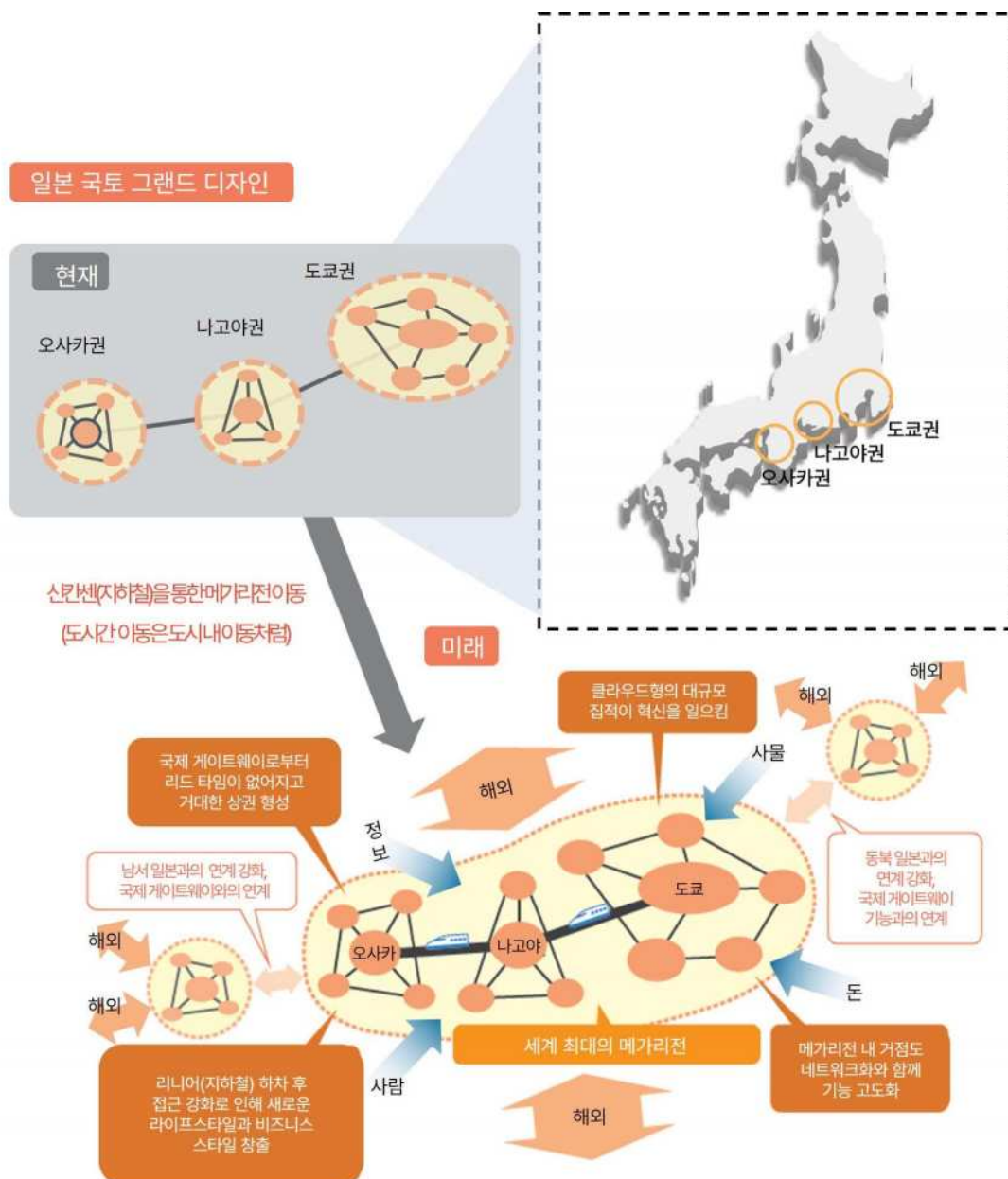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수도권 일극 → 다핵 거점 네트워크화

- 2008년 일본 국토교통성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국토 그랜드 디자인’을 발표하여 광역적 공간구상* 도입과 도쿄 일극 집중 탈피 선언

* 도쿄(수도권)-나고야(중부권)-오사카(긴키권)를 하나로 잇는 광역권을 형성

- 이와 함께,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국토의 다극 네트워크형 공간구조화를 방침화하고 거점의 콤팩트시티화 추진

<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 “대류 촉진 국토 형성” >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https://www.mlit.go.jp>). 2014. 「특집호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 “대류 촉진 국토 형성”」

주 1) 메가리전(mega-region): 여러 도시와 지역들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을 형성하는 인구 밀집 지역

□ 지방 대도시 거점 육성의 분절적 구축·지원체계

- 지방 성장을 위한 여러 정책·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광역권 내 공간적으로 산재 추진되고 부처별 개별 지원과 중복 투자 발생
- 지방의 경쟁력 확보와 기존 사업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유치·지원 기능을 집중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 추진이 중요

< 부처별 정책·사업 시행 현황 및 한계 >

비교 사례	소관 부처	정책·사업의 한계
연구단지형 (연구개발특구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연구기능 위주의 고립된 입지로 인해 지역산업 주체와의 기술협력 미흡
창업보육형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벤처 기업부	· 보육기관 졸업 후 확장공간 부재(지역이탈),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기성기업 및 산학연 주체의 네트워크 부재
기업입주형 (산업단지 등)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생산기능 위주로 편성된 공간구성 탓에 혁신기능과 정주 기반 부족(인재유치 불리)
정주기반 결합형 (신도시 자족시설 등)	국토교통부	· 신도시 자족용지는 기술분야를 특화할 앵커기업이나 혁신 기관이 부재해 기업유치나 스타트업 육성이 어려움

자료: 조성철·남기찬(국토연구원). 2022.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방안」

- 특히 지역 혁신을 선도하고 기업·인재에게 전주기적 지원 기능을 제공할 공간적 융합 거점과 정책적 통합 플랫폼은 부재한 상황
- 지역 혁신 정책·사업들이 부처 단위에서 공간적으로 산재·추진되어 기능이 불충분하거나 혁신생태계 형성의 전주기 지원 어려움

< 지역혁신공간 관련 정책 사례의 도입기능 비교 >

혁신공간 사례	소관 부처	공간 형태	주요 혁신영역	도입기능 비교			
				교류공간	전입공간	협력공간	보육공간
디지털 혁신거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면적 공간	산업	기능 부재	기능 부재	디지털R&BD 협업센터 등	SW테크 비즈니스센터 등
테크노 파크	중소벤처 기업부	면적 공간	산업	네트워킹 라운지	코워킹 스페이스	기능 부재	창업동
청년창업 사관학교		점적 공간	산업 문화	기능 부재	기능 부재	기능 부재	주거연계 창업보육
팁스타운		점적 공간	산업	네트워킹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기능 부재	스타트업 입주공간
스타트업 파크		면적 공간	산업	네트워킹 라운지	기능 부재	기능 부재	스타트업 입주공간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토 교통부	면적 공간	산업 문화	커뮤니티 센터 등	기능 부재	사업화 연구공간 등	창업보육 공간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RISE)	교육부	네트워크 공간	산업 문화 사회	기능 부재	기능 부재	공동캠퍼스	기존 공간 활용 (지역대학)

자료: 조성철 외(국토연구원). 2024. 「지역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방향」

2. 해외 동향

① 정책 동향

- 21세기에 이르러 전세계적으로 고밀도 도심형 혁신공간(innovation district)* 형성의 중요성 부상

* 도심형 혁신공간 :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관련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과 연계되어 집적한 고밀도 공간으로 사무, 주거, 상업 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혁신의 중심지로 정의(Katz and Wagner, '14)

* 보스턴에서는 도시 외곽 전자산업 혁신 클러스터인 Route 128 쇠퇴 이후 보스턴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등 도심지역으로 거점 이동 경향

- 도심부 고밀도 환경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창출하는 창의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 융복합 중요성 증대

- 청년인재들의 도심부 선호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트렌드*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미국,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청년들이 혁신 일자리와 대중교통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이 낮은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임(Moos et al, '19)

< 미국, 캐나다 주요 도시 내 청년거주 분포('19) >



자료: Moos et al. 2019. 「Youthtification across the metropolitan system: Intra-urban residential geographies of young adults in North American metropolitan areas」

- 양질의 일자리에 더해 인재를 장기적으로 지역에 체류시키는 실질적 장소 플랫폼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확대

- 주요 동종·이종 산업 주체의 공간적 밀집 및 상호 네트워크 형성으로 혁신 창의 인재들의 아이디어 교류 촉진

- 산업뿐만 아니라 직·주·락의 결합으로 혁신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주환경 구축 시도
 - * 미국 보스턴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는 약 12,000호의 주택 중 15%는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15%는 소규모 주택으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김선우 외, '18)
- 과거 대규모 교외형 단지로 형성되었던 혁신공간 또한 보다 나은 혁신인재의 직·주·락 환경을 갖추기 위한 개선의 움직임
 - *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TP)는 초기 교외형 연구단지로 개발되었으나 '10년 이후 신규 마스터플랜 수립, 정주환경 개선 및 공공 공간 형성 노력(brookings, '14)
- 혁신 공간 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중앙정부의 파격적 세제 인센티브로 민간 기업의 투자 유인
 - * 제약회사 'Vertex Pharmaceuticals'는 보스턴 혁신지구로 이전하며 500개의 추가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1천만 달러의 세금 감면 인센티브 지원(New Jersey Future, '12)
 - 단순히 일시적 개발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장기적·지속적 투자 및 운영·관리에도 초점
 - * 룩셈부르크 벨발 혁신캠퍼스는 재정과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폰드벨발재단(Foundation of Fonds Belval)을 설립하여 개발·운영관리 담당(Le Fonds Belval, '15)
- 도시, 건축 규제 완화에 더해 기업 활동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 진입 업종 다양화 등 혁신 아이디어 발굴 지원
 - 성장전략의 실현에 필요한 과감한 규제 및 제도를 개혁하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정비
 - * 캠브리지 켄달스퀘어는 1977년, 바이오 연구 수행을 위한 재조합 DNA 실험의 규제 완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제약 산업허브로 성장
 - * 싱가포르의 원노스는 주거·상업·여가·업무공간의 혼합용도 배치, 토지용도 전환이 자유로운 화이트존을 지정하여 특화 및 혁신 공간 형성을 적극적으로 권장

2 주요 사례

□ (미국) 도심 내 주요 혁신 기관을 앵커로 하여 기업·창업·교육기관 집적, 지원·규제 완화와 더불어 공공 공간 형성 및 정주환경 개선 노력

○ (캠브리지시 켄달스퀘어) MIT(메사추세츠공대)와 하버드를 중심으로 제약·바이오·IT벤처·연구기관이 집적된 BT(Bio Technology) 클러스터 형성

- 지구상 가장 혁신적 1마일 스퀘어라는 별칭으로 보스턴의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의 중심축 역할(Katz and Wagner, '14)

- MIT·하버드大·메사추세츠종합병원(MGH)과 인접하고 정주·생활·문화적 여건을 갖춘 환경에 기반하여 개방형 혁신문화 창출

* (일자리 확보) 혁신 일자리 2.9만개와 부가 일자리 14.7만개 창출(Aretian, '21)

* (투자유치와 기업 가치) 6년간('17~'23) 992억달러 투자, 기업가치 1,700억달러(IRB, '24)

< 캠브리지시 켄달스퀘어 주요 혁신기업 입주분포 >



자료: (좌)Katz, 2014. 「The rise of innovation districts」

(우)조성철, 2022. 「지역 혁신공간에 대한 실행 및 운영방안 연구」 p.136

○ (세인트루이스시 코어텍스) 융복합 업무·주거 환경의 창출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매력적인 공공 공간 조성으로 생명과학 중심 혁신공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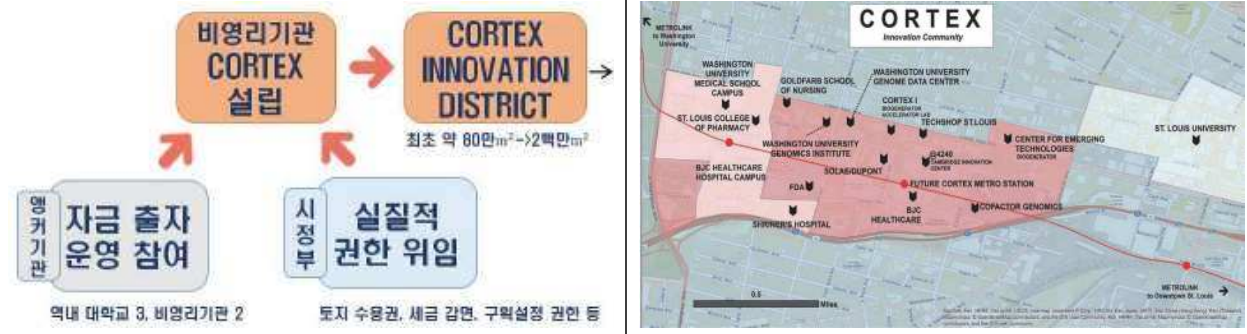
- 1950년 대비 2010년 인구 감소율이 62.6%로 지역 소멸 문제를 겪었으나 신산업 전환 및 혁신공간 조성으로 위기 극복

- 사업 초기 앵커 대학(워싱턴大, 미주리大 등)·병원(BJC)·문화기관(미주리 식물원)이 초기 투자·결집하고 연방·주정부 지원(1억6,800만달러)

* (창업 지원) 8,00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4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6,000여 개의 일 자리를 창출하는 등 계획목표의 50% 이상 달성('18 기준)(Read, '20)

* (세수 증대) '14~'18년까지 5년간 2,100만 달러(약 2,500억 원) 세수 증가로 지역 활성화 효과 창출(Read, '20)

< 세인트루이스시 코어텍스 혁신지구 조성 및 주요 혁신기업 입주분포 >



자료: (좌)Drucker et al. 2019. Katz and Black. 2020.

(우)Read. 2016. 「Case Studies in Innovation District Planning and Development」

○ (애틀랜타시 아틀랜틱 스테이션) 브라운 필드였던 과거 제철소 부지를 '15년까지 복합용도 지역으로 전환하고자 재개발 프로젝트 실시

- 공공의 초기 인프라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 초기부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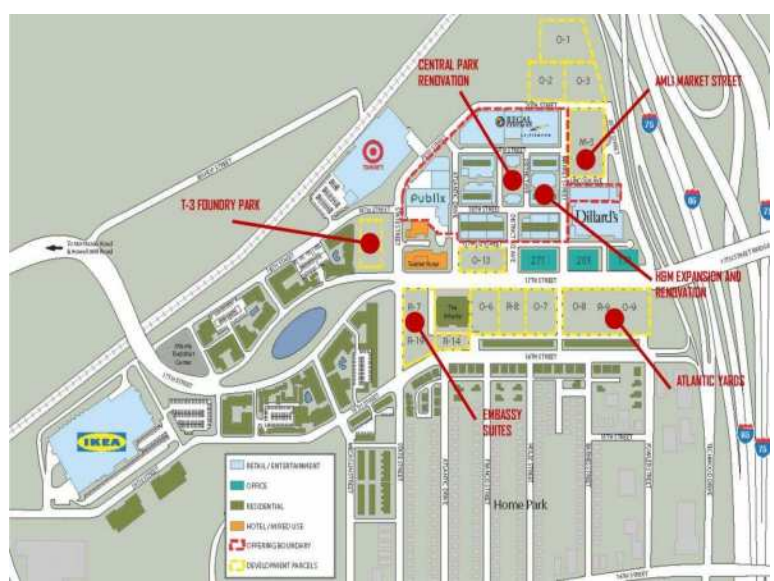
- * (세수 증대) TIF 기반 세수 증가로 애틀랜타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였으며 연간 1,800만 명 방문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소비 지출 증대(City of Atlanta, '15)
- * (재정 지원) 인베스트 애틀랜타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인센티브(계약금 지원, 자가 재할 및 세금 감면), 중소기업 지원(보조금, 대출 및 기술 지원)(Invest Atlanta, '25)
- * (주요 성과) 신규 일자리 2,161개 창출(비즈니스 유치 및 확장 포함), 부가가치 15억 달러(Invest Atlanta, '25)

< 애틀랜타 아틀랜틱 스테이션 개발 전후 비교 >

아틀랜틱 스테이션 개발 전후



아틀랜틱 스테이션 마스터플랜



□ (유럽)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제공, 산업 전환에 발맞춘 적극적인 신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공간 형성

○ (스페인 22@ 바르셀로나) 도시재생 프로젝트 22@Plan의 연계로 양질의 주거와 문화, 과학과 교육, 생산과 레저가 공존하는 지식 집약형 첨단산업지역 형성

-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시 혁신공간 형성에의 성공적인 재원 마련 및 쾌적한 정주·기업환경 보장

* (민간 인센티브) 30%의 공공용지 제공 시 남은 70%에 대해서는 부지개발권을 부여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업종 코드가 첨단산업에 해당될 경우 고도 제한 완화

* (정주환경 개선) 확보된 공공용지에는 공공임대주택, 녹지공간, 교육 연구시설 등을 조성하여 종사자들을 위한 저렴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

* (기업 및 일자리 유치) 8,223개의 기업 유치, 9만 3,000개의 일자리 확보

< 스페인 22@ 바르셀로나 주요 혁신기관 >



○ (룩셈부르크 벨발 혁신캠퍼스) 벨발 공장부지를 재개발하여 벨발-유니버시티 기차역과 룩셈부르크 대학을 중심으로 과학연구혁신도시 형성

- 산업 고도화·신산업 접목, 대학 및 기업지원센터와의 네트워킹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 정부의 강력한 국가·국제 연구·혁신허브 정책을 통해 10억 유로가 지원·투자되었고, 폰즈 벨발(Fonds Beval) 재단이 전문 운영 전담

* (투자 지원) 기업·창업지원센터인 테크노포트는 1명이라도 1유로만 투자하면 1일 내에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1-1 정책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며 '15년까지 7,800만 유로(약 1,038억 원)의 투자 연결 실적

* (기업 및 기관 유치) '20년, 유럽우주자원혁신센터(ESRIC, European Space Resources Innovation Centre) 설립,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 유치 및 지원

< 벨발 혁신캠퍼스 전경 및 주요 핵심기관 >



캐나다
왕립은행투자서비스
(랜드마크, 금융서비스
지원)



테크노포트 벨발
(창업, 벤처기업 지원
스타트업 허브 기능)



지식의 집 및 도서관
(교육·연구기관)

- (아일랜드 더블린 스마트 도크랜드) 금융·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통한 더블린식 도시재생 모델을 토대로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개념 도입
- Google, Airbnb 등 많은 대기업의 유럽 헤드쿼터를 유치하고, 금융·법률·기술 관련 다양한 혁신기관이 생태계 형성 지원
- 노후·쇠퇴한 물류항·도크랜드 부지를 전략개발구역(SDZ)으로 설정하여 계획수립-실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개발
- 실제 지역·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기업·인재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여 입주수요 확보
- * (혁신생태계 형성) 쿼드러플 헬릭스 모델(산·학·연 + 시민사회)을 도입하여 다양한 사회 주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기반경제의 지역혁신모델 구축(아일랜드시, '22)
- * (유연한 산업 전환) 글로벌 금융산업의 중심지에 안주하지 않고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핀테크, 프롭테크, 애그리테크, 인슈어테크 등 다양한 미래산업 주도

< 룩셈부르크 스마트 도크랜드 구역 및 주요 혁신기관 >



자료: <https://seoulpi.io/article/100301>

□ (아시아) 공공-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직·주·락 고밀 복합 개발 추진,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의 개발 참여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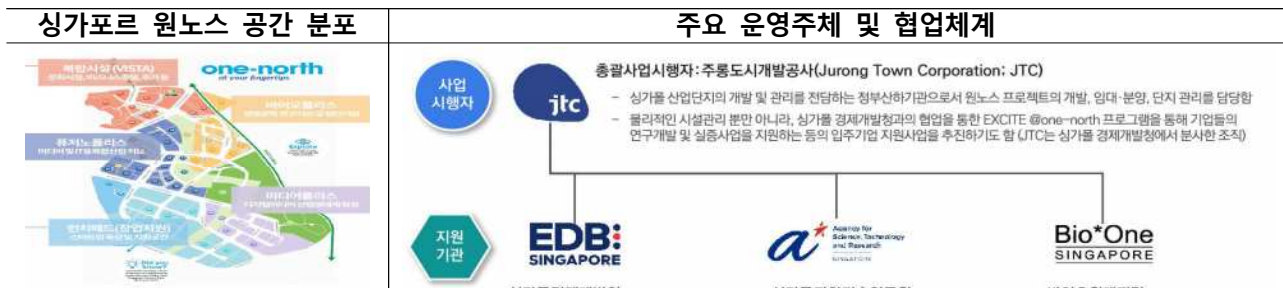
○ (싱가포르 원노스) 일(Work)-생활(Live)-놀이(Play)에 연구(Research), 학습(Learn)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연구단지

- 공공의 혁신 인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초 발굴에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원스톱 패키지 연구특화단지

* (입주 현황) 바이오폴리스의 입주율은 단계별로 80~100%에 달하며, 세계적인 제약회사 12개소의 연구개발센터 입주(싱가포르 정부, '18)

* 바이오메디컬 부분 부가가치 10조원 창출, 15,000명의 일자리 창출 등 세계 수준의 바이오 분야 연구 및 생산 거점으로 발돋움(LH, '22)

< 싱가포르 원노스 공간분포 및 운영 구조도 >



○ (일본 오사카 우메키타 프로젝트) 오사카역 북쪽의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재개발하여 상업·업무·주거·여가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공간 조성

-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분할하여 공공-민간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추진

* (지역 활력 증대) 1기 프로젝트 완료 이후 연간 방문객은 약 5천만명 수준으로 당초 목표인 3,650만명보다 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있음(오사카시, '23)

* (민간자본 유치) 민간 사업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용적률 평균 600% → 최대 1,100%까지 상향, 상향분만큼 민간의 공공기여 추진

< 오사카 우메키타 프로젝트-공공기여를 통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및 공공 공간 형성 >



3. 도심융합특구 추진 시사점

- **(지방 인구·산업 회복 절실)** 지방 경쟁력과 고부가·혁신 일자리 공급을 위해 청년·기업이 선호할 혁신자산 집적과 정주·문화 여건 조성 중요
 - 비수도권 인구·산업 위축은 경제 활력(산업·인재·정보 소통)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균형성장을 위한 거점·생태계 재구조화 필수
 -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성장 견인을 선도할 초광역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기 구축하고 파격적(선택과 집중 원칙) 육성 전략 추진 중요
- **(지방 산업 고도화·혁신 중요)** 제조·서비스업의 고도화와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 필요
 - 지방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연이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혁신을 견인할 기업·인재 유치와 R&D 집적·연계 확대 중요
 - 국가·광역적 연계가 용이한 지방 대도시 도심에 고부가·혁신산업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여 제조업 첨단화와 융복합화 지원 필요
- **(혁신자원 편중과 격차 해소)** 수도권·충청에 집중된 대학·연구소·특허 등 혁신자산의 광역적 집적·확대와 네트워크화 필요
 - 지방은 인프라·투자·인재 부족으로 혁신 활동이 제한되어, 혁신 임계 규모 형성을 위한 산·학·연 및 정주·투자 거점 마련 긴요
 - 혁신생태계 진입에서 도약·전환까지 기업·인재·투자를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기능을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원스탑 제공 유효
- **(청년·혁신인재 정주기반 확충)** 청년층의 비수도권 기피 요인을 해소하는 정주·문화·생활 환경과 선호 일자리 공급 중요
 - 지방은 물리적 개발 편중으로 균형적 정주여건과 질적 환경 확보가 어려워, 직주락이 결합된 품격 있는 공간 확보 절실
 - 여건이 양호한 지방 대도시 도심의 직·주·락 복합화를 꾀해 경쟁력 있는 정주·문화·생활 환경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공급 유효

□ **(파편·분절적 지원체계 통합)** 기업·인재 성장·혁신의 생애주기 전반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는 범부처 통합 마중물 지원 필요

○ 부처별 정책·사업의 개별 추진은 기업·인재 집적과 정착을 저해하여, 전주기 생태계(창업·교류·성장·투자) 통합 지원 절실

→ 초광역적 혁신·일자리 거점에서 기업·인재 성장 전주기(창업·육성→성장·유치→생태계·정주)를 범부처가 공동 지원하는 정책패키지 유효

□ **(민관협력과 전문적 운영·관리)** 지방 성장·혁신의 주체인 기업·인재들의 수요를 반영할 민관협력과 전담 주체의 지속·전문적 운영

○ 그간 공공 주도적 추진은 실제 주체인 기업·인재의 수요 반영이 어려워, 민·관·학·연의 전문적 역할 분담과 시너지 확보 필요

→ 현장에 강한 민간이 사업 전 과정(기획·시행·운영)을 함께 하고 거점의 조기 활성화와 성숙화를 담보할 전담 기관의 주체적 역할 중요

<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한 시사점 >

이슈	현안과 과제	시사점
지방 인구·산업 회복 절실	지방 위축과 활력·경쟁력 저하 → 거점·생태계 재구조화로 국토 전반 균형성장 견인	- 초광역 혁신·일자리 거점 조기화 - 파격적 육성 전략 추진
지방 산업 고도화·혁신 중요	지방 경제 성장·고도화 지연 → 혁신·성장기업과 인재 유치 환경 조성 및 R&D 집적·연계	- 대도시 도심 고부가·혁신산업 지원 생태계 조성 - 제조업 첨단화 및 융복합화
혁신자원 편중과 격차 해소	인프라·투자·인재 부족 → 혁신 임계규모 확보를 위한 산·학·연 및 정주·투자 집적	- 전주기 지원 기능 집적 거점화 - 기업·인재·투자·정주를 통합 원스탑으로 제공
청년·혁신인재 정주 기반 확충	물리적 개발과 정주 환경 미흡 → 직주락 융합거점 확보 및 공간적 품격 향상	- 대도시 도심 직·주·락 복합화 - 정주·문화·생활의 고품격 환경과 고부가 일자리 공급
파편·분절적 지원체계 통합	개별 사업의 기업·인재 정착 저해 → 생애전주기 통합 집적 지원 하는 거점 형성 긴급	- 초광역 거점 중심 기업·인재 전주기 유치 생태계 조성 - 범부처 공동 정책패키지화
민관협력과 전문적 운영·관리	공공 주도로 수요 반영 어려움 → 민·관·학·연 역할 분담과 시너지 확보 중요	- 민간의 전 과정 참여·협력 - 사업 조기 활성화와 성숙화 담당 전담 기관 운영 강화

Ⅲ. 계획의 기본 방향

1. 비전과 목표

비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 혁신으로 도약하는 지방 대도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적 공간과 네트워크 응집으로 지역인재의 성장·기회 거점 조성 • 기업·기술·투자가 융합하는 균형성장과 혁신의 용광로 형성

1 3대 추진 전략

- ① (청년·지역인재의 정주·일자리 거점) 고밀도 복합 공간과 직·주·락 결합 정주·생활·문화 기반으로 고부가 일자리 공급과 삶의 질 혁신
 - * 수도권 주요 거점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정주환경과 장소 브랜드 형성
- ② (메가시티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초광역권의 분절·파편적 혁신 자원을 물리·기능적으로 결집·복합화하고 고속·광역교통망 연계
 - * 5극3특 메가시티 형성 전략과 상응하는 거점별 특화(공간·산업)·연계(교통망)
- ③ (기업·기술·투자의 통합 지원 앵커) 인재 육성, R&D, 기업 기술·투자를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혁신 생태계의 전 주기 지원 시스템 구축
 - * 범부처 지원과 제도·세제 혜택을 압축·포괄적 패키지로 전개하는 공간플랫폼

2 5대 정책과제

①	기업·인재의 유치·착근을 위한 전후방 지원생태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R&D 지원생태계 결합으로 기업·인재의 특구 유치·착근 확대 - 최고 수준의 기업·기술 협력·투자 프로그램 완비
②	청년·여성·지역인재 선호에 부합하는 장소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주·락+교육·의료 결합 정주·일자리 거점 조성 - 국가·지역 거점들과의 고속·광역교통 연계 강화
③	5극3특 메가시티에 상응한 특구 최적화 및 추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특구의 단계적 추진과 사업 조기 활성화 -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 추진
④	사업방식 다각화와 특구의 차별적 브랜드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규모·구조의 다각화와 추진 자율성 제고 - 파격적 제도·세제와 범부처 지원의 패키지형 지원
⑤	정부·지자체의 기업·인재·사업 지원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앵커시설과 특구재단 조성 및 운영 - 재정지원 및 금융투자 강화로 기업·인재 유인 촉진

< 도심융합특구의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정책과제 >

도심융합특구 비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 혁신으로 도약하는 지방 대도시

도심융합특구 추진 목표

매력적 공간과 네트워크 응집으로
지역인재의 성장·기회거점 조성

+

기업·기술·투자가 융합하는
균형성장·혁신의 융광로 형성

3대 추진 전략

도심

청년·지역인재의
정주·일자리거점

+

융합

메가시티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

특구

기업·기술·투자의
통합 지원 앵커

• C³ 추진 전략 : 콤팩트(Compact)+
클러스터화(Cluster)+중심화(Core)

• I³ 추진 전략 : 혁신(Innovate)+
연결(Interweave)+융합(Integrate)

• S³ 추진 전략 : 규제혁신(Sandbox)+
패키지(Suite)+특구화(Special-zone)

5대 정책과제

과제 1 기업·인재의 유치·착근을 위한 전후방 지원생태계 형성

과제 2 청년·여성·지역인재 선호에 부합하는 장소 브랜드화

과제 3 5극3특 메가시티에 상응한 특구 최적화 및 추가 육성

과제 4 사업방식 다각화와 특구의 차별적 브랜드 제고

과제 5 정부·지자체의 기업·인재·사업 지원 실효성 제고

2. 5대 정책과제와 세부 추진 전략

① 기업·인재의 유치·착근을 위한 전후방 지원생태계 형성

(1) 추진 배경

- ☐ 기업·인재의 지방 이전·유치와 관련하여 유인이 되는 차별적 (경제·사회적 기회비용, 세제), 실질적(정주비, 생활복지) 지원책 취약
- ☐ 지방의 기술창업·성장을 위한 정보와 투자가 수도권 또는 일부 대도시에서 산재되어 있어 기업·인재 접근성 취약

(2) 추진 전략

- ☐ 공공·R&D 지원생태계 결합으로 기업·인재의 특구 유치·착근 확대
 - 스타트업, Post-BI, 스케일업 등 성장·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지원할 공동연구 인프라와 지원기관* 집적
 - * 공동연구 Open Lab, 특구별 특화 R&D, 출연연(분원), 대학공동캠퍼스, 특구재단 등
 - 수도권 및 지역 내 기업의 유치 및 지역 착근을 위해 토지·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집중 제공
 - * (기업) 기회발전특구 등 결합 지원으로 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 파격/패키지 지원
 - ** (인재) 특구 내 종사자에게 지방세 면제, 임대료 및 생활SOC 활용 지원(바우처)
- ☐ 최고 수준의 기업·기술 협력·투자 프로그램 완비
 - 특화산업의 기술·시장·산업·기업 등 정보를 망라한 통합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방향 기술매칭 지원
 - * 광역권 출연연/대학 등의 기술/기업/특허 정보/자산을 수집·공유하는 기술 큐레이션 서비스
 - 특구 내 기업 투자를 위한 엔젤펀드 연계* 지원과 출연연·TP 등을 활용한 R&D 협력 강화
 - * 지역 내 엔젤펀드의 일정 부분을 특구 내 기업에게 우선 할당

② 청년·여성·지역인재 선호에 부합하는 장소 브랜드화

(1) 추진 배경

☐ 양질(고부가가치산업)의 일자리가 공급되고 청년·여성·지역인재가 선호하는 여가·문화·교육·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정주거점 미흡

☐ 수도권 주요 거점(판교·마곡·상암 등)과 비교할 때 입지·공간적 특화 부족으로 기업·인재 유치에 한계

* (선호조건) 다기능 복합공간, 소속·유대적 문화, 특화·현대적 컨셉·경관(로컬리티)

(2) 추진 전략

☐ 직·주·락+교육·의료 결합 정주·일자리 거점 조성

○ 직(職)·주(住)·락(樂)이 고밀도로 복합된 도심 정주환경*과 수도권과 경쟁하는 고품질 교육·의료·문화 서비스** 접근성 제공

* 도시의 기존 자산을 활용하여 보행권역 내에서 직·주·락이 가능한 집적·복합공간

** 청년·신혼부부 거주를 강화할 특화학교/병원, 생활SOC(수영장·도서관 등) 등 설치·유치

○ 특구 내 공공·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디지털·신산업(ICT/SW), 공공·전문직, 유연직(시간선택형) 비율 확대

* 특구 내 공공기관/기업의 일자리 직종·유형·대상 다각화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지원

☐ 국가·지역 거점들과의 고속·광역교통 연계 강화

○ KTX·광역고속철도 등 고속·광역교통망의 이동·접근성 활용으로 초광역권은 1시간대, 전국은 2시간대 거점간 이동성 보장

* 수도권 내 주요 거점간 이동에 버금갈 수 있는 1~2시간대 특구/광역거점간 이동성 보장
(예시) 판교~마곡간 : 1시간 15분(지하철) vs. 대전특구~울산/특구 : 1시간 15분

○ 초광역권(메가시티)의 고속·광역철도망과 연계하여 주요 광역 거점들과의 연계와 특구로의 접근성 강화*

* 충청권 CTX, 동남권 광역철도, 부산 BuTX,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과 접근성 강화

③ 5극3특 메가시티에 상응한 특구 최적화 및 추가 육성

(1) 추진 배경

-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화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자립적 성장 동력 및 경쟁력 확보에 국가 총력 대응

* 수도권 면적 11.8% vs. 인구 50.9%, 경제성장기여율 60.3%, 30대 기업 시가총액 95.5%

- 현재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된 5개 지방 광역시*외에 혁신 잠재력이 큰 광역도(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에도 수요 존재

* 대도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24.11)

(2) 추진 전략

- 기존 특구의 단계적 추진과 사업 조기 활성화

- 기 지정·추진 중인 특구를 단계적으로 구분·추진*하여 성과의 조기화-집적화-확산의 선순환 구조 형성

* 기 추진 도심융합특구는 대규모(85~192만㎡)로 성과 창출에 장기간 소요 전망

** (단기)핵심 앵커기관/시설 운영 → (중기)연관 기업/인재 집적 → (장기)혁신생태계 확장

- 연관 기업과 인재 유치의 유인책이 될 핵심 앵커사업 추진과 기관 유치·운영에 우선 집중하여 사업을 조기 활성화

* 특구의 차별성 확보와 브랜드화를 조기에 정립하여 연관 기업/인재 집적을 가속화 할 파일럿 프로젝트(공공지원·핵심시설·운영기관)를 우선 추진

-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 추진

- 기존 5개 지방 광역시 특구 외에도 혁신 잠재력이 풍부한 지방 대도시에 특구 추가 지정* 추진

* 광역적 위상을 갖춘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도심

- 주변 지역자산·시설의 최대한 활용을 통해 규모 최적화, 사업유형 다각화*로 초광역권 내 거점간 연계 및 성과 창출의 효율성 향상

* 일부 자산·시설 확보 + 혁신잠재력 풍부 → 부족한 기능·시설 플러그인(Plug-in) 및 연계

④ 사업방식 다각화와 특구의 차별적 브랜드 제고

(1) 추진 배경

- 그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공공주도 택지·산단 공급으로 입지·규모·수요 측면에서 현실적 다양성 반영 한계

*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혁신도시 vs. 민관협력형 마곡·상암, 테크노폴리스/기업혁신파크

- 유관·유사 특구와 비교할 때 차별적 강점과 브랜드, 인센티브 확보가 어려워 필요 기능·수요 유치에 어려움

* 각 부처의 특구 제도는 87종, 지정 특구는 2,437개에 달함(국정기획위원회, '25)

(2) 추진 전략

□ 사업주체·규모·구조의 다각화와 추진 자율성 제고

- 지역과 수요에 최적화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프로젝트·지역상생리츠** 등 활용

* 기업혁신파크·캠퍼스혁신파크를 결합 추진하거나 기업·대학을 공동사업시행자와

** 단기 앵커사업 또는 특화사업에는 기획-추진-운영을 포괄한 프로젝트리츠 도입

- 지자체·대학·기업이 주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구재단·지원기구 지원과 주체 간 역할분담* 강화

* 기업대학 기획투자운영 + 공공(국가·지자체) 행재정 지원 + 재단·지원기구 컨설팅·협약·중재

□ 파격적 제도·세제와 범부처 지원의 패키지형 지원

- 기회발전특구 중복 지정과 도시혁신구역 의제 처리, 최혜적 국공유지 임대*, 통합 인허가 등 파격적 제도 지원과 절차 간소화

* 국공유지 임대(사용허가)기간 50년, 국공유지 점용(사용)료를 최혜(1%) 적용, 수의계약 등

- 최고 수준의 기업·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혜택과 인재·H/W·S/W를 포괄하는 지원프로그램 등 범부처 지원 집중

* (교육부)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 (중기부)메이커스페이스, (산업부)스케일업 기술사업화 등

⑤ 정부·지자체의 기업·인재·사업 지원 실효성 제고

(1) 추진 배경

- 지방의 인구감소와 경제·사회적 축소로 투자수요·재원 마련과 지자체의 재원 분담 어려움* 지속 확대

* 지방 5대 광역시 재정자주도 변화('05-'25) : 부산 81.3%→61.4%, 대구 87.3%→64.8%, 광주 77.1%→60.5%, 대전 86.6%→63.8%, 울산 81.7%→73.0%(통계청, '25)

- 지자체는 재정 지원 확대와 추진 절차 간소화, 기업은 종사자 정주 지원, 인재는 정주환경 조성 요구

* 지방 이주 종사자 지원 : (대기업)자체 기숙사·주거 vs. (중소기업) 종사자 자체 해결

(2) 추진 전략

- 핵심 앵커시설과 특구재단 조성 및 운영

- 도심융합특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앵커시설과 특구재단 조성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

- 사업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되는 특구재단은 국가와 지자체 단위에서 조기 병행 설립·운영*하여 사업의 주체적 지원 강화

* (국가 재단) 국가적 지원과 특구간 연계, (지역 재단) 개별 사업 추진·운영 및 기업기관 협력

- 재정지원 및 금융투자 강화로 기업·인재 유인 촉진

-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 설치를 지원하는 기존 재정사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특구의 조기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

* (공공건축물) 종사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특구재단, 공동캠퍼스, 기업지원센터 등

- 기업·인재양성을 위한 엔젤펀드 유치, 지자체 특별회계 신설, 기금과 펀드·리츠* 등 다양한 재원 활용

*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지역개발기금, 리츠·지역투자공사 등으로 조달재원·주체 다각화

3. 사업 유형과 지정 기준

□ (사업유형) 공간권역에 따른 역할·기능을 구별하기 위해 사업 유형을 광역시 도심융합특구와 대도시 도심융합특구로 구분

①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지방 광역시 도심 인접지역에 지정하며 다양한 산업 일자리가 창출되는 융복합 혁신거점으로 육성

- (대상지역) 5개 지방 광역시

- (지정규모) 산업, 주거, 상업, 문화기능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초광역 거점기능 육성을 위해 최소 50만m² 이상의 규모로 지정

- (육성방향) 전문서비스업, 인력양성, R&D·스타트업 등 광역적 발전 생태계 결핍기능을 보완하는 혁신·일자리 거점 형성

② (대도시 도심융합특구) 광역적 거점위상을 갖춘 지방 대도시에 지정하며, 뚜렷한 특화분야를 가진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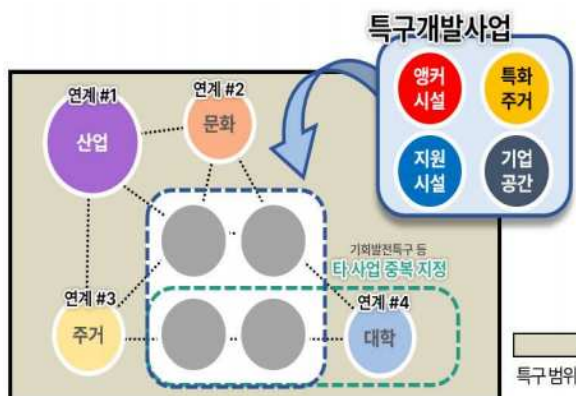
- (대상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지정규모) 산업·정주기능의 복합개발 및 집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 10만m² 이상의 규모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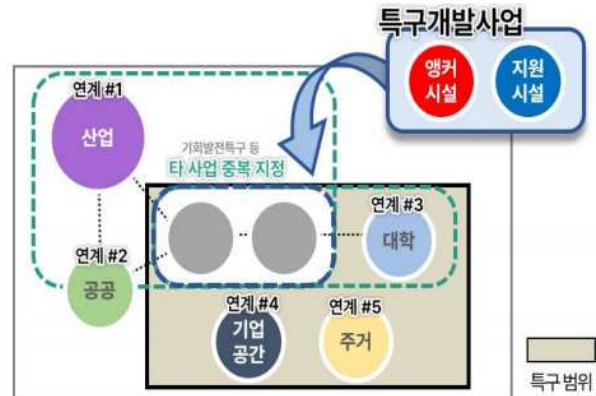
- (육성방향) 산업특화 분야 혁신기관을 집적화하고, 근로자·기업에 대한 지원체제와 정주환경이 결합된 도심형 산업특구로 육성

< 도심융합특구 사업유형별 추진 개념 >

<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



< 대도시 도심융합특구 >



□ **(지정기준)**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된 5개 지방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로 구분

①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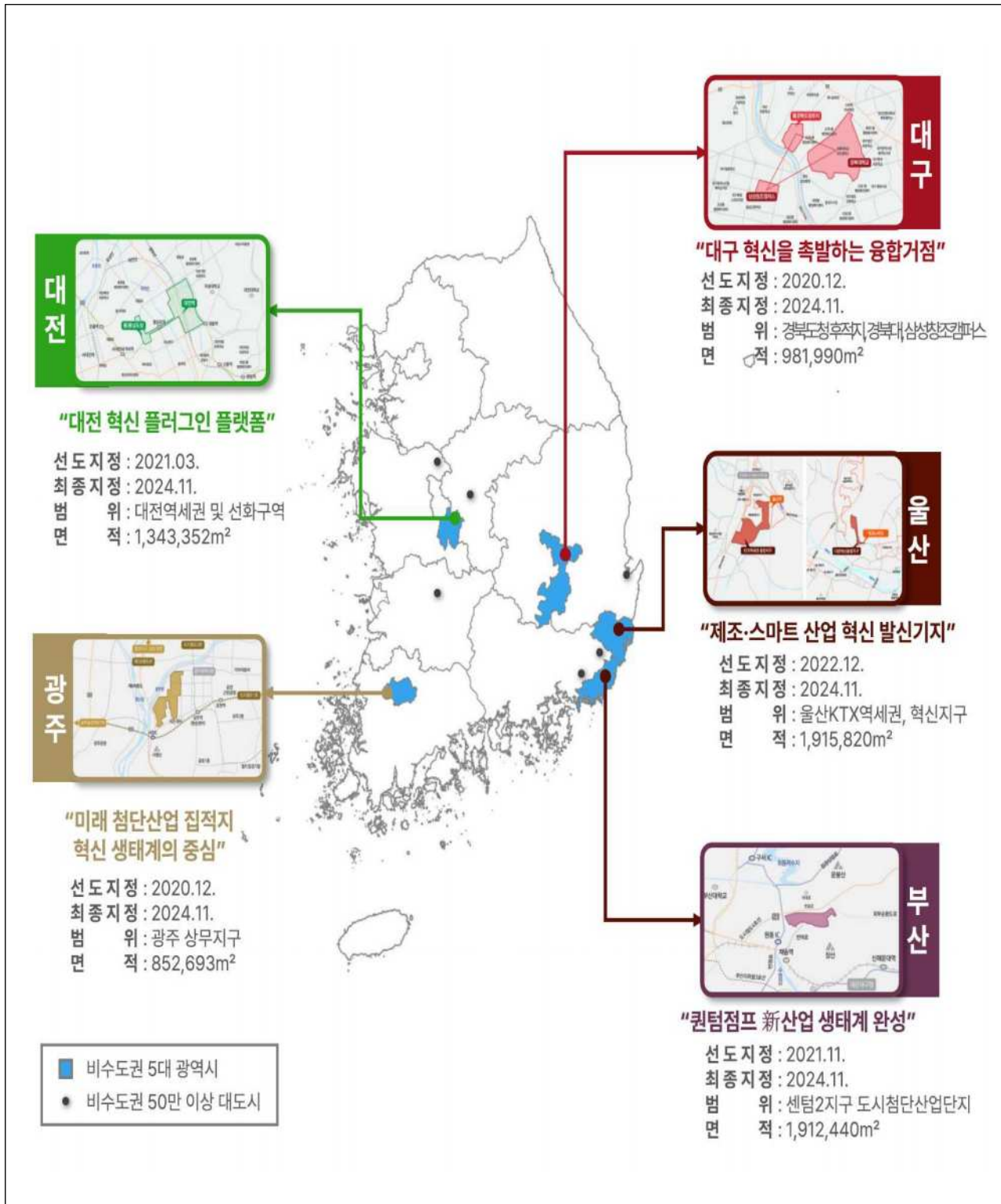
- **(입지여건)**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이며,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 초광역생활권의 중심지로서 문화적 활력과 다양성을 갖춘 고밀화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고 있을 것
 - 5대 지방광역시에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
 - 특구가 여러 지구(또는 사업구역)로 구성된 경우, 지구간 이격거리는 차량 이동 30분(또는 직선거리 15km, 도시생활권) 이내일 것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광역교통 시설과의 접근성이 양호해 기능적으로 연계된 개발이 가능할 것
- **(협력 가능성)** 대학·연구소·기업·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 대학·연구소·기업지원기관 등 지역 내 혁신기관의 집적이 이뤄져 있거나, 향후 집적화 계획이 존재할 것
 - 혁신도시, 국가산단, 관련특구 등과의 광역적 협력 및 기능 연계, 초광역권(메가시티) 차원의 산업·서비스 지원에 유리한 입지일 것
- **(성장 잠재력)**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 지역산업을 지원할 다양한 전문서비스업을 육성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 지방비 투입, 지방세제 지원, 부지임대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지원계획이 있을 것

② 대도시 도심융합특구

- **(입지여건)**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이며,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
 - 광역적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며, 상업·편의·문화·교육시설 등 정주환경이 대상지역 주변에 확보되어 있어 연계 가능할 것
 - 특구가 단일이 아닌 여러 지구(또는 사업구역)로 구성된 경우, 지구간 이격거리는 보행 이동 30분(또는 직선거리 2km, 보행생활권) 이내일 것
 - 국가·일반산단 및 관련 특구와의 기능적 협업, 대도시 차원의 산업·서비스 지원에 유리한 입지일 것
- **(협력 가능성)** 대학·연구소·기업·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 지역전략산업 분야 산학연 역량이 집약된 클러스터 육성이 유리한 지역일 것
 - 특구 육성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대상 지역에 인접해 있고, 추가적인 집적화 계획이 존재할 것
- **(성장 잠재력)**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 지역 전체에 파급력을 갖는 산업육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기업의 투자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 지방비 투입, 지방세제 지원, 부지임대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지원계획이 있을 것

IV. 특구별 조성·육성 및 초광역권 활용 방향

< 도심융합특구 지정 위치 및 현황 >



1. 부산 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 전략

□ **(도입 배경)**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의 결합으로 센텀시티 연계형 첨단 ICT 융·복합 4차산업 기반 혁신 거점 조성

○ **(현황 및 여건)** 지역 경제인구 감소 및 전통 주력산업 성장동력 상실 등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 전환점 마련

- 산업구조 노후화 및 지역 성장동력 상실*, 경제인구 감소**,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응하는 지역 성장거점 조성 필요

* (성장동력 침체) 부산 제조업 연평균 증가율(1.8%), 전국 평균(3.5%) 절반 수준('10~'21년), GRDP 연평균증가율은 1.6%로, 전국 평균 2.8% 대비 저조

** (경제인구 감소) 전국 경제활동인구 연평균 +0.6%, 부산 -0.4%('16~'21년)

*** (고용 침체) '22년 부산 고용률(57.5%) 17개 시도 중 최하위, 실업률(3.3%)은 전국 2번째로 높은 고용 빙하기 직면

○ **(혁신자원 및 잠재력)** 동부산권 중심지 센텀시티, 해운대구와 인접하여 우수한 혁신자원 연계 및 직·주·락 인프라 활용 가능

- 해운대구 내 집적되어 있는 풍부한 혁신자원*과의 연계·협력 및 입주기업의 전주기 지원 가능

* 부산 상위 40대 누적 투자유치 스타트업 중 22개사(55%), 7대 전략산업 관련 지역 선도 기업 292개사 중 45개사(15.4%) 해운대구 집적('21년)

- 디지털경제 신기술 기반 성장 역량과 공항·철도·항만 등 Tri-Port 인프라 보유로 지속 성장의 기회요인 존재

○ **(특구 도입 필요성)** 지역 혁신거점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도심융합특구 결합 지정으로 인프라 및 지원체계 형성

- 기존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특구 중복 지정, 「센텀2지구도시첨단 산업단지계획」 원안 의결('22년 12월)로 신속한 개발 추진력 확보

- 주력산업의 융합화·고도화, 미래유망산업의 전략적 육성, 지식·혁신 주도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도심형 혁신단지 형성 목표

- 신성장동력 산업발굴 및 융·복합 산업 고도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청년인재 일자리 창출·R&D 지원을 통한 산업 연계 강화

□ (육성 방향)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및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 회복

○ (공간 현황) 센텀시티와의 연계 및 기존 산업단지 계획의 극대화를 위해 기지정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중복 지정

-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468 일원*

*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 (면적) 1,912,440m²(개발사업 면적 : 1,912,440m²)

- (개발 방식) 센텀2지구 내 도심융합특구 단계적 개발

< 부산 도심융합특구 공간 현황 >

부산 도심융합특구 위치도	특구개발사업 위치도
	
	<p>(1단계 사업) Neo DNA :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부산 산업대전환 및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DNA 주입</p> <p>1. 컨트롤 타워 계획(4개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기업종합지원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 제조업 공급기술 지원 - 부산형 빅데이터 혁신센터 설립·운영 <p>2. 벤처창업혁신(3개 사업)</p> <p>3. 인재양성(3개 사업)</p> <p>4. 미래 신산업 육성(7개 사업)</p> <p>(2단계 사업) 3C Future : Creativity, Co-working, Connecting 기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창의적 협력 촉진</p> <p>※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 이후 사업 가능</p> <p>(3단계 사업) Ino-Living : 완성형 주거복지 구축을 통한 청년 중심 정주 환경 혁신</p> <p>※ 반여농산물시장 이전 이후 사업 가능</p>

자료: 부산광역시. 2024. 부산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

- **(조성 목표)** 퀀텀점프 新산업 생태계 완성을 위한 “혁신과 동반
성장이 함께하는 청년 중심 성장 허브 구축”
 - 주력산업 전환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유망 신산업
성장동력 마련, 앵커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미래 시장 창출 동력 확보, 청년 중심 친환경
정주여건·문화예술공간 조성을 통한 직·주·락 거점 형성
- **(추진 전략 ①)** 사업이 가능한 1단계 부지 우선 착수 → (주)풍산
부산사업장(2단계) → 반여농산물시장(3단계) 단계적 개발 추진
 - 1단계 부지에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기업지원센터,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최우선적으로 설립하여 특구조성사업 총괄 및 지원
 - 2·3단계 개발에 대해서는 공장·시장 이전과 부지 조성을 거쳐
순차적 완공 및 분양
 - 1~3단계 사업 추진 및 성숙 여건과 부울경 메가시티의 신산업 특화
분야를 현장수요를 중심으로 지속적 모니터링하여, 지역 R&D 자원
연계 강화 및 전후방 산업협력 약점 보완에 초점
- **(추진 전략 ②)** 기업·인재유치·정주문화 관련 여러 부처 사업을
결합하여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기능 복합 강화
 - **(산업)** 다양한 부처 사업(산업부, 과기부, 보건부, 행안부) 및 부산테크노파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과의 연계로 지역 수요 맞춤형 산업 기반 조성
 - **(교통)**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운행횟수 증대, 사업지구 내 공영
차고지(반여) 확보로 효율적인 노선 조정과 배차 확대
 - **(주거)** 창업·벤처기업과 연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주택(일자리연계형
청년공공임대주택 등) 제공으로 맞춤형 정주환경 조성과 인재 유치
 - **(여가·문화)** 복합문화공간 BS-SQUARE 구축으로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공공 공간 확충 및 도심융합특구의 직·주·락 실현

- **(운영 전략)** ICT 기반의 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센텀시티 및 주요 혁신기관과 연계한 부산 혁신성장 동력 마련
 - **(주요 육성 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사업, 첨단제조업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을 중심으로 유치
 - * 상위 및 관련계획, 미래성장 유망 업종, 지역자원 극대화 업종을 평가하고, 이에 준하여 육성 산업 선정
 - **(민간 참여)** 민간 창업시설 약 10만m² 조성 계획 및 민간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등 민자 유치 적극 노력
 - **(기능 강화·연계)** 연구개발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연계 지정으로 입주 부담 완화 및 수요중심의 기술발굴, 산학연 연구활성화
- **(단계별 실행계획)** 사업을 총 3단계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부지 개발하고, 특구 내 기업 역량을 순차 육성하여 기술사업화에 노력
 - **(성과 목표)**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의 선제적 개발을 통한 창업 생태계 구축 이후,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이중 산업과의 융합
 - **(1단계)** 부산의 창업지원 역량을 통합하고, 연구개발 클러스터 집적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
 - **(핵심사업)** NEO-DNA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기업종합지원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기 마련 및 운영
 -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설립을 통해 사업 운영·관리 전반을 조기에 담당하여 특구 사업의 활성화 지원 및 지속가능성 담보
 - 수요조사에 따른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산재된 지역 R&D자원 연계, 산업별 전후방 협력을 통해 지역의 미래 신산업 창출
 - **(2단계)** 부산의 기존 주력산업을 4차산업과 연계하여 개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정체된 부산 산업 활성화
 - **(3단계)** 첨단기술을 활용한 MICE 산업,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이주한 청년이 머물고 싶어 하는 완성형 정주 여건 조성

2. 대구 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 전략

- **(도입 배경)** 대구광역시 기존 도심의 주요 중추 기능을 활용하고 인접 산단 및 교육기관 연계로 지역 혁신역량 극대화
- **(현황 및 여건)** 대구광역시 도시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기존 인프라 활용에 용이하나, 혁신자원 및 인재의 지속적 유출 우려
 - 금호워터폴리스, 엑스코, 로봇산업 클러스터 등 융합산업 연계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 인접
 - 신천 수변공원, 대구체육관, 대구오페라하우스, DGB파크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인프라 근접
 - 임금근로자 감소 및 비임금근로자 증가 추세이며, 청년·일용직·여성 등 노동취약계층의 노동시장 내 구직활동 둔화 흐름
 - * 임금근로자 34.5천 명(3.6%)↓ 비임금근로자 10.8천 명(4.0%)↑('24년 동월 대비)
 - 연구개발 및 국가 R&D 사업에 대한 투자 대비 성과 저조
 - * (투자추이) 총 연구개발비 11위, 국가 R&D 사업 투자 추이 7위('15-'19, 17개 시·도)
 - ** (사업화 현황) 전국 평균 대비 8.25%p 저조('17-'19)
 - *** (특허 출원·등록 현황) 출원 대비 등록 건수 0.58건('19년, 전국 평균 0.65건)
- **(혁신자원 및 잠재력)** 도심융합특구 대상지 내 기존 혁신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 활용으로 혁신 역량 극대화
 - * (캠퍼스혁신파크) 경북대학교 내 AI, ICT 기술창업 클러스터 및 교육·연구 공동체 혁신 공간 조성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대구경북 대학교육 및 지역산업 혁신을 위해 대학-지자체-연구기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 추진
 - *** (스타트업타운) 제조업기반 첨단제조 벤처창업기업 집적공간 마련을 통한 청년 제조 창업가 유입 및 기술벤처 혁신산업 허브 구축
- **(특구 도입 필요성)**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일자리 체질 개선 긴급요, R&D 사업 등 연구개발 사업의 부가가치 창출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접근을 통한 경제·산업 고도화 및 대구 혁신을 촉발하는 융합거점 창조 중요

□ **(육성 방향)** 산업혁신거점(옛 경북도청 부지)-인재육성거점(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창업혁신거점(삼성창조캠퍼스)의 특구 트라이앵글 조성

○ **(공간 현황)** 개발부지는 경북도청 이전 이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로 일부 활용, 주변으로 경북대학교와 삼성창조캠퍼스 입지





-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학로 80, 호암로 51 일원

* 경북도청 후적지(14만㎡), 경북대학교(75만㎡), 삼성창조캠퍼스(9만㎡)

- **(면적)** 981,990㎡(개발사업 면적 : 140,536㎡, 연계사업 면적 : 841,454㎡)

- **(개발 방식)** 경북도청 후적지 면적 개발 및 타부처 사업 접목

< 대구 도심융합특구 공간 현황 >

대구 도심융합특구 위치도	특구개발사업 위치도
	
	1. 산업혁신거점 1) 글로벌 R&D존 2) 혁신기업존 3) 앵커기업존 4) 공원
	특구연계사업 위치도 
	1. 산업혁신거점 1) 문화예술허브(특구개발사업 부지 내 문체부 연계사업) 2. 인재육성거점(경북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연계) 3. 창업허브거점

자료: 대구광역시, 2024. 대구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

※ 실시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허브 등 개발사업의 위치도 변경 예정

- **(조성 목표)** 대구 혁신을 촉발하는 新융합거점 창조
- **(추진 전략 ①)**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을 통해 청년, 지역 기반 혁신기업·기관 육성 및 주요 육성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공간 조성
 - 경북도청 후적지에 글로벌 R&D존, 혁신기업존, 앵커기업존을 조성하여 고밀도 복합혁신공간을 구상하고, 문화예술허브(문체부 연계사업) 조성으로 여가공간 확보
 - 대구 미래신산업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도심 활성화 및 지역문화와 산업의 융합으로 신활력 창출, 지역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스타트업부터 앵커기업까지 다양한 기업 간 협업시스템 구축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지원, 경북대학교(전략2)·삼성창조캠퍼스(전략3)와 직접 연계 가능
- **(추진 전략 ②)** 경북대학교를 연계·활용하여 혁신인재 육성거점 형성과 원천기술 개발 등을 위한 활동공간 조성
 -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R&D 및 R&BD 전문인력 및 맞춤형 인재 육성 생태계 구축, 대표 앵커기업 유치로 고급 일자리 조성
 - 특화분야별 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 기술창업 등 연계·협력(대학·출연연-민간기업-도심융합특구재단 등)
 - 캠퍼스 혁신파크, 글로컬 대학 등 산·학·연 연계 국가사업 유치, 기존 혁신자원의 연계와 집적을 통한 혁신거점 형성 기대
- **(추진 전략 ③)** 삼성창조캠퍼스와 기업지원센터의 연계로 도심 내 문화·체육·예술과 융합된 창업허브거점 형성 및 활동공간 마련
 - 삼성창조캠퍼스가 시민들의 복합 문화공간이자 남부권 벤처창업 거점으로 운영되는 기능·역할을 도심융합특구에서 활용
 - 미래산업 전문 융합인력 양성 및 창업에 대한 기본적 지원, 청년 인재 활동공간 제공 등 혁신기업 유치의 촉매제 역할 강화

- **(운영 전략)** 전문인력 양성·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데이터 기반 지역산업·서비스 혁신체계 구축, 대구형 미래신산업 선정 및 육성
 - **(주요 육성 산업)** UAM 산업, 도심 서비스로봇 산업, 지능형 반도체 산업, 헬스케어, ABB산업(AI·빅데이터·블록체인)*
 - * 대구 육성산업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
 - **(민간 참여)** 경북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참여, AI 기반 탄소중립 ZEB 에너지데이터 통합플랫폼 추진(특구개발사업 내)
 - **(기능 강화·연계)**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 인재 육성 및 기업지원을 통해 대구시에 분포하고 있는 각 특구와 기능 연계 유도
- **(단계별 실행계획)** 공공의 마중물 사업을 우선하여 특구 조성 선 추진 및 지속적인 산업·정주환경 개선으로 직·주·락 생태계 구축
 - **(성과 목표)** 기존 혁신기관(삼성창조캠퍼스-경북대)과 특구진흥재단의 협업을 통한 기능 극대화도 신규 혁신거점 개발의 발판 마련
 - **(1단계)**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설립 및 삼성창조캠퍼스-경북대학교의 연계로 특구 활성화 기반 조기 마련
 - **(핵심사업)** 경북도청 후적지 산업혁신거점 내 문화예술허브(문화체육관광부 부처협업사업 공동 추진) 우선 조성과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설립으로 운영·관리 기틀 확보
 - 경북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연계를 통해 특구 내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삼성창조캠퍼스-경북대), 경북대기술지주(주) 연계로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과 수익모델 개발
 - **(2단계)** 혁신 기능 확보 이후,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사업의 단계적·점진적 추진을 통한 혁신 기능 순차적 도입 및 활성화
 -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지속적인 부처(문화체육관광부) 협의로 경북도청 후적지의 온전한 개발과 기능 확보
 - 거점(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혁신기관(삼성창조캠퍼스-경북대)의 혁신 역량 확산 및 고도화 지원

3. 광주 도심융합특구 조성 · 육성 전략

- **(도입배경)** 광주 상무도심 인근 직·주·락 복합 거점 마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 및 기업에게 매력적인 혁신플랫폼 조성
- **(현황 및 여건)** 광주광역시 내 광역·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상무도심 자원과의 연계 가능
 - * (광역교통여건) 공항(2.7km), 종합버스터미널(3.6km), KTX 송정역(4.6km) 인접
 - ** (대중교통여건) 지하철 1호선 및 2호선(예정)이 사업지구 도보권 내 입지
- 상무지구 신도심('03년 개발 완료)과 연접하여 있어 주거·상업·의료 등 거점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특구가 위치한 광주광역시 서구는 5년간 총인구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세대수는 증가 추세로, 가구의 1인·소형화* 진행
 - * 광주 서구 총인구 30.6만 → 28.9만, 세대수 12.7만→13.4만('18년→'22년)
- 광주 내 혁신자원의 산발적 분포 및 광역교통 여건 미흡으로 혁신성과의 전국적 연계와 확산, 고도화에 어려움
- **(혁신자원 및 잠재력)** 지역 전략산업인 AI, 디지털, 의료 등 미래첨단 신산업분야의 핵심거점 구축과 산업생태계 고도화
- 광주연구개발특구(대상지 북측) 내 GIST·광주TP 입지/AI클러스터 형성, 광주특구*와 혁신도시를 잇는 신성장 산업축의 중심
 - * 한국광주과기원, 전남대학교, 남부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광기술원 등
- **(특구 도입 필요성)** 광주·전남권 내 주요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플랫폼·지역산업 성과 확산을 위한 전략 거점 형성
- 개발가능용지 중 대부분이 공유지와 농지인 사유지로 거점 형성을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 특구 내 기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문화·의료사업의 연계·활용 및 맞춤형 토지이용구상 수립으로 특구 시너지 제고 기대
- 삶(Live)-일(Work)-여가(Play)의 균형잡힌 초연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및 혁신인재 정주 거점 조성

□ (육성 방향) 광주 신성장 산업축의 중심 거점으로 인접한 상무도심 및 기추진 연계사업과의 협력을 통한 도심 기능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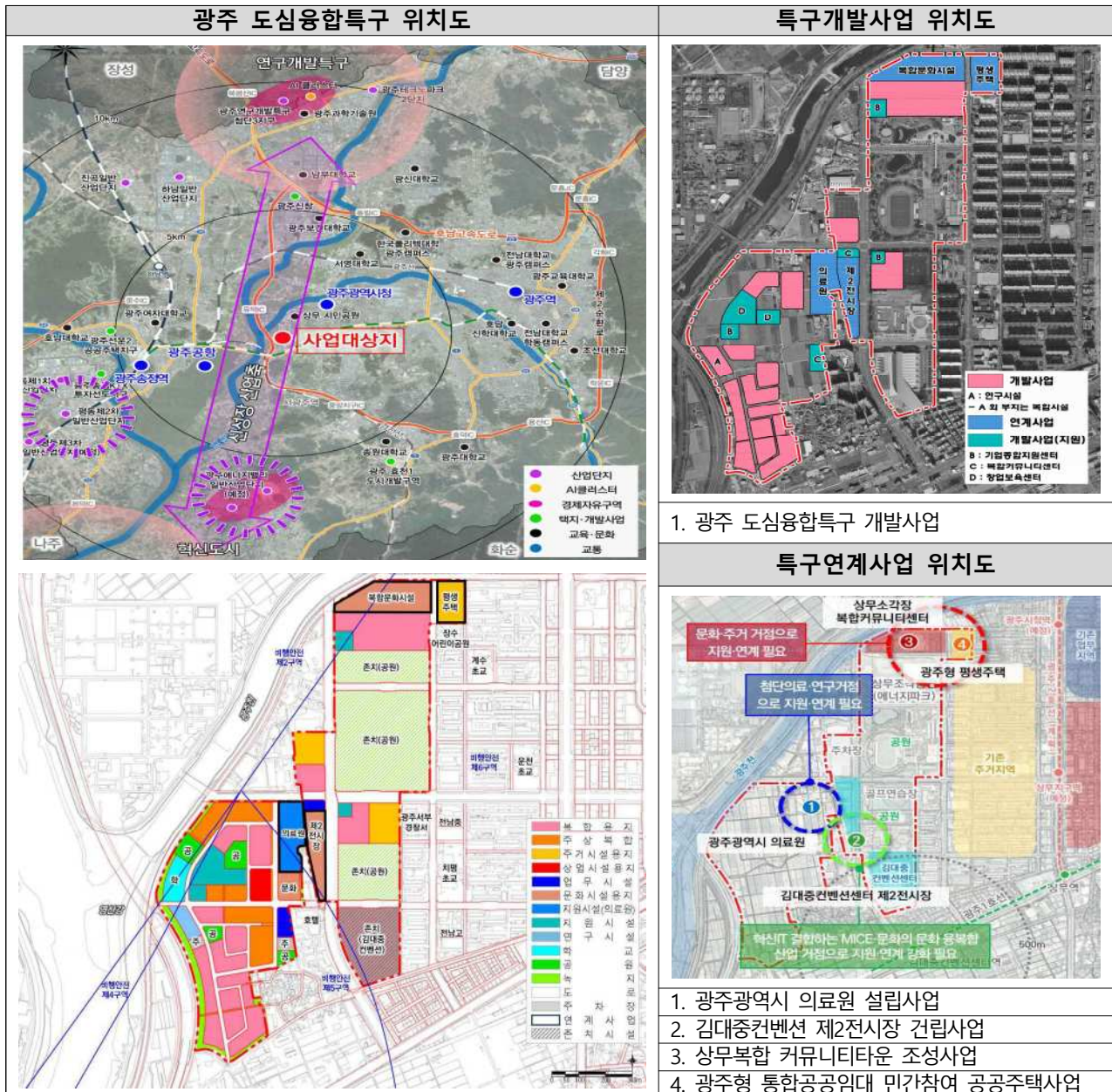
○ (공간 현황) 광주 상무지구 신도심과 인접해 있으며, 대규모 유희부지의 절반(약 29만㎡)이 공공 소유로 신속한 특구조성 기대

-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898-32번지 일원 * 광주 상무지구

- (면적) 852,693㎡(개발사업 면적 : 852,693㎡, 연계사업 면적 : 91,298㎡)

- (개발 방식) 상무지구(기존 시가지 형성) 인접 저이용지 신규 개발

< 광주 도심융합특구 공간 현황 >



- **(조성 목표)** 미래 첨단산업 집적지·혁신 생태계의 중심 형성
- **(추진 전략 ①)**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디지털 융합, R&D 혁신, 스마트 첨단특화, MICE/문화 융복합 등 권역적 육성 앵커 마련
 - **(의료·디지털 융합 생태계)** 광주의료원(연계사업)과 연계한 AI, 헬스케어 중심 기업 유치 및 R&D·업무·지원·Test-Bed 등 지원
 - **(R&D 교육 혁신 융합 생태계)** 디지털 전방위 혁신 R&D 광역 HUB 중심거점 구축, 하천변 및 공원 인접배치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
 - **(스마트 첨단특화 생태계)** 스마트 첨단 제조업 중심의 청년 창업/유망벤처 유치, 직주근접 및 정주환경 확보
 - **(MICE-문화 융복합 생태계)**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연계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시설 연접배치로 MICE-문화 중심거점 강화
- **(추진 전략 ②)** 지역 내 분산된 주요 혁신 기능을 집약하는 전략산업 혁신벨트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및 역량 집중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 인공지능 연구단지 구축을 위해 전남대(캠퍼스혁신파크)-도심융합특구(상무지구)-AI집적단지(첨단지구)를 연결하는 삼각벨트 조성
 - AI집적단지(기업중심 실증), 전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창업, 연구중심 실증) 연계를 통해 우수 혁신인력을 도심융합특구에 집적
- **(추진 전략 ③)** 도심융합특구 내 기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특구 개발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직·주·락 혁신 거점 형성
 - 기존 상무 도심 내 종사자의 특화주거 수요와 특구의 단계적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주거 수요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공급
 - 김대중컨벤션 제2전시장 건립사업, 상무복합커뮤니티타운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MICE-문화 중심거점 강화

- **(운영 전략)**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혁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전략산업의 집단화와 시너지 극대화
 - **(주요 육성 산업)** 지역특화산업(인공지능(AI), 자동차, 에너지)과 연계한 첨단제조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연구서비스산업, 과학기술·연구·서비스 산업
 - * 광주광역시 전략 육성산업(AI, 디지털 등) 및 지역 내 산업 현황, 산업기능간 연관성을 고려한 육성 분야 선정
 - **(민간 참여)** 의료분야 민간기업 유치를 통한 연관기업 수요 확보, 상무도심 내 주요 혁신기관들의 특구 이전
 - **(기능 연계·강화)** 기회발전특구, 디지털 혁신지구,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의료·디지털 입주기업 규제 최소화 및 신기술 활용·실증 허용, 세제 혜택, 규제 특례, 재정 지원 강화
- **(단계별 실행계획)** 특구 지원기관(진흥재단 등)과 주요 앵커기관을 우선 유치하고, 점진적 기업·인재 유치를 통해 혁신 산업생태계 확장
 - **(성과 목표)** 준치 및 기추진사업과 연계하여 권역별(스마트 첨단특화, 의료/디지털 융합, R&D 혁신, MICE/문화 융복합) 육성전략의 단계적 추진
 - **(1단계)** 특구 지원기관 및 공공·민간 앵커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1차적인 산업 수요 확보 및 혁신생태계 선조성
 - **(핵심사업)** 지자체·지방공기업 보유지를 우선 활용하여 특구 지원기관(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기업종합지원센터)을 우선 설립·구축
 - 민간 앵커기업 및 광주테크노파크와의 연계를 통한 관련 산업 파생수요의 지속적 추가 유치 기대, 연관 산업 생태계 구축
 - **(2단계)** 특구 내 거점기관·시설을 마중물로 기본적 혁신 지원 기능을 확보하여 기업·인재 추가 유치 및 직·주·락 거점개발 확대
 -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지를 지속 확대하여 상무지구 권역 확장(1차)-앵커·관련기업 특화주거(2차) 등 정주·생활여건 확보
 - 거점 개발사업의 단계적 확장 및 주변 타부처 연계사업과 결합한 동종·이종 산업 혁신 역량 확산과 고도화 지원

4.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 전략

- **(도입배경)** 대전광역시의 국가 교통결절점 역할과 R&D 앵커 기능을 활용하여 국토 균형발전 연계 역할 수행과 광역 거점 기능 강화
- **(현황 및 여건)** 국토 정중앙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하나 원도심 역세권 활용 미흡, 지역 내 연구개발 역량 대비 연구환경 질적 개선 필요
 - 대전광역시 확장에 따른 대전역 원도심 낙후* 및 신규 개발에 따른 외곽 신도시 쏠림현상 가속화로 기존 도심 기능 쇠퇴
 - * 도심융합특구 대상지 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약 41.6%('21년 기준)
 - 기존 산단·특구에서는 연구기관의 단절적 운영으로 소통환경 미흡, 기업 입주공간 및 문화·편의시설 부족('21년, 연구개발특구)
 - 대전시뿐만 아니라 세종시* 및 충청권역을 대표하는 광역권 중심 거점 역할 수행의 필요성 증대
 - *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12)에 따라 세종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대도시 경쟁력 강화 및 상호 보완 기능 마련 필요
- **(혁신자원 및 잠재력)** 국가적 연구기반(대덕연구개발특구 등)으로 형성된 고차 첨단지식·기술·문화* 활용, 지식산업 중심 도시기능 확대
 - * R&D 종사자 2.7만명 수준으로 비수도권 1위(경기 11.8만명, 서울 6만명)
 - ** 지식기반서비스업 성장률 9.9%(수도권 10.1%, 전국 6.9%) ('09-'18)
 - *** 인구 대비 세계 상위 100대 과학기술클러스터 순위 세계 7위(WIPO, '23)
- '70년대부터 조성이 시작된 대덕특구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메카로 자리매김하였고, IT·방산·바이오 혁신을 선도 중
- **(특구 도입 필요성)**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전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며, 원도심 역세권을 활용한 혁신기능 파급력 강화
 - KTX 역세권을 활용하여 대전·충청권 및 전국으로 혁신자원 확산 및 연계, 혁신주체 간 교류·협력 확대
 - 원도심 역세권 내 직·주·락 결합의 혁신공간 조성으로 정주여건 향상·기업활동 지원 및 비수도권 대도시 경쟁력 확보

□ **(육성 방향)**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대전·충청이 보유한 혁신 연구 성과의 전국·글로벌 확산 허브와 기술 사업화 거점으로 육성

○ **(공간 현황)** 대전 원도심 지역으로 대전역세권을 포함하고 있어 초광역 거점으로서 특구의 브랜드화 및 정체성 강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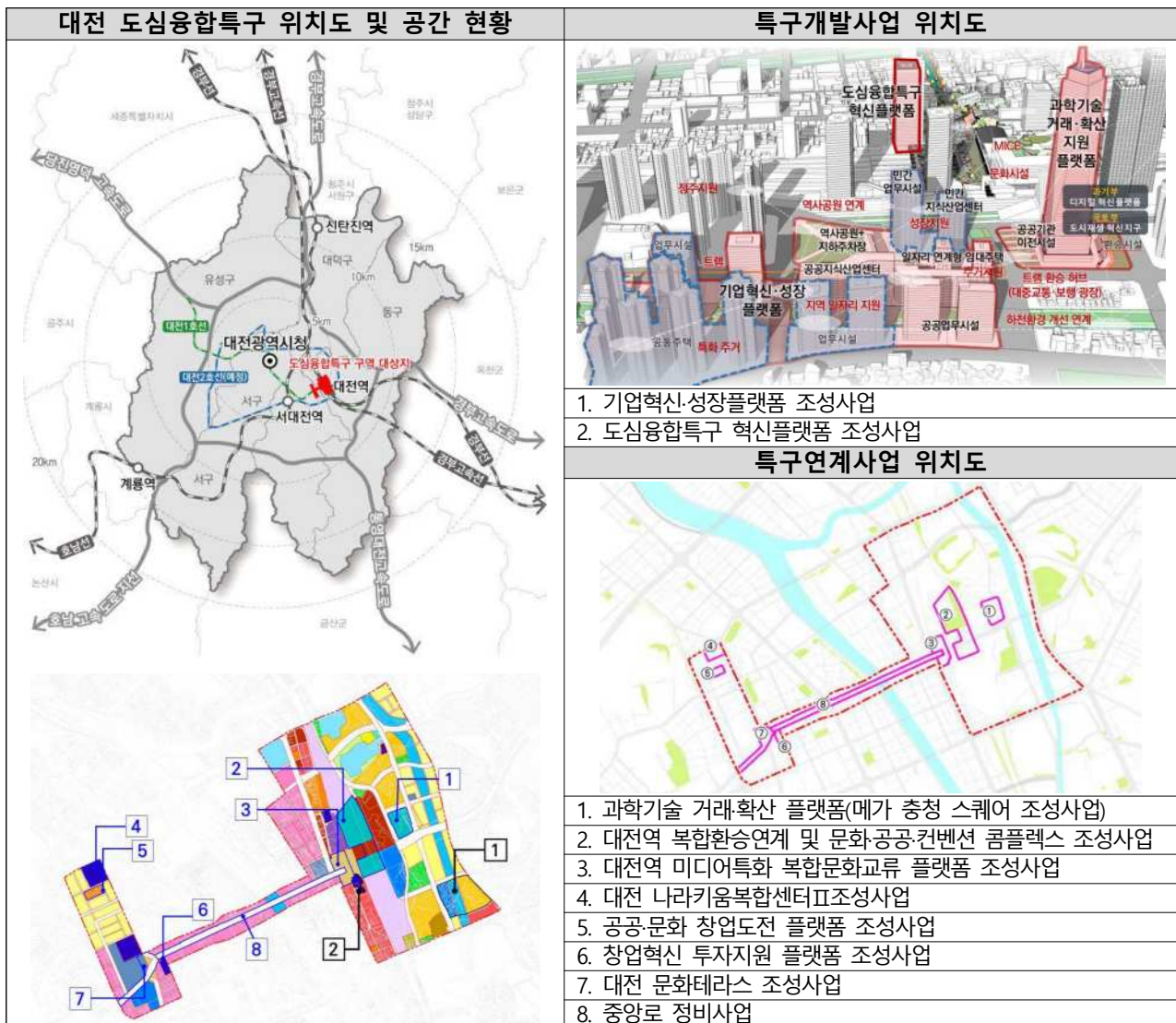
-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1 일원*

* 대전역세권, 옛)충남도청사 일원 및 중앙로 일원

- **(면적)** 1,343,352㎡(개발사업 면적 : 44,822㎡, 연계사업 면적 : 141,999㎡)

- **(개발 방식)** 대전 원도심 지역에 위치하여 점적 개발 유효

< 대전 도심융합특구 공간 현황 >



자료: 대전광역시, 2024. 대전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차량 진·출입 계획)를 반영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추후 수정을 검토할 계획임에 따라 향후 공간 현황 변경 예정

- **(조성 목표)** 대전·충청의 과학·기술 융합과 전국·글로벌 거래·확산을 지원하는 '대전 혁신 플러그인 플랫폼'(Innovation Plug-in Platform)
- **(추진 전략 ①)** 대전역을 거점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커플링 체계 및 지식산업거점 형성으로 초광역권 교류·연계 촉진
 - 대덕특구의 첨단지식·기술과 세종·충청권의 고차 지식산업·서비스를 집적·융합하여, 과학·기술 거래를 확산하고 지식기반 고부가서비스 중심의 인재·기업 육성 기반 마련
 - 대전역의 전국·광역 연계 교통체계와 원도심의 도시·문화서비스를 전국·광역 단위로 연결되는 지식·문화의 흐름체계 구축
- **(추진 전략 ②)** 주력산업 활성화와 기술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과학기술거래·확산플랫폼 조성
 -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성과와 기술이 실증되는 과학기술거래플랫폼 조성 및 상시 교환 환경 조성
 - 로컬 기반 생활·문화 서비스를 융합하여 생활·문화 창업 전주기(창업-스케일업-실증-사업화)를 원스톱 지원하는 육성 플랫폼 마련
- **(추진 전략 ③)**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다양한 지원기능의 집적과 시민과 종사자의 여가공간 확보를 위한 문화 기능 촉진
 - 중앙로 축제특화가로와의 연계로 대전역에서 선화구역 문화광장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문화의 띠' 형성
 - 문화·공공·컨벤션 콤플렉스 조성, 여가시설 확충 및 복합문화교류 플랫폼 형성 등 대전 원도심의 문화적 잠재력 극대화
- **(추진 전략 ④)** 특구의 지속·안정적 운영·혁신 및 브랜드화 도모, 청년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4차 산업형 정주·교육·지원플랫폼 구축
 - 도심융합특구를 통해 유입되는 청년·혁신인재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다양한 특화주거 제공
 - 특구 지원기관 중심으로 지속적인 특구 운영 기반과 브랜드 확보

- **(운영 전략)** 대전·충청 특화산업(IT 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합, 정밀기기 등) 사업화, 도심지에 도입 가능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
 - **(주요 육성 산업)** 지식기반제조업군의 생물산업, 정밀기기,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및 우주항공산업,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등
 - * 대전시 지역특화산업 및 대전시 4대 전략산업, 대덕특구 특화분야에 기반한 산업 선정
 - **(민간 참여)** 도심융합특구 혁신플랫폼 내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 공급, 대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대학 공동캠퍼스 추진
 - **(기능 강화·연계)** 기업혁신·성장 플랫폼 내 기회발전특구 연계 지정으로 외부 전문인력 유입 및 직주근접 실현
- **(단계별 실행방향)** 공공의 마중물 사업을 우선하여 특구 조성 선 추진 및 지속적인 산업·정주환경 개선으로 직·주·락 생태계 구축
 - **(성과 목표)** 미래기술과 첨단산업, 혁신적 인재가 다층적으로 소통·교류하고 전국적으로 성과를 확산시키는 상호 교류·혁신 강화
 - **(1단계)** 기업혁신·성장플랫폼과 도심융합특구혁신플랫폼 조성 및 과학기술거래·확산플랫폼과 문화테라스로 대단위 복합거점 형성
 - **(핵심사업)** 특구 내 앵커시설(혁신플랫폼+과학기술거래확산플랫폼+문화테라스) 개발·연계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특구 형성의 앵커 확보
 - 도심융합특구혁신플랫폼에 특구 추진·운영(진흥재단) 기반과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문화테라스(문체부 협업)로 복합화 추진
 - 기업혁신·성장플랫폼에 특히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거점 조성의 마중물 역할 수행, 전국 앵커기업과 유니콘 기업 유치 촉진
 - **(2단계)**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 파급을 위한 맞춤형 산업공간 형성, 혁신 인재에게 안정적인 직·주·락 환경 구축과 정주 안정화
 - 대전역 복합개발과 환승센터를 통해 전국 단위의 초광역권 접근성 확보, 부처 사업 연계로 생태계 확산과 네트워크 강화
 - 도심융합특구 성장 기반인 청년·창의인재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주거 공급과 문화·여가 기능(문화·생활SOC시설) 강화

5. 울산 도심융합특구 조성 · 육성 전략

- **(도입 배경)**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의 제조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통해 지방 혁신 성장역량 강화 및 전국 단위로의 제조혁신 확산
- **(현황 및 여건)** 울산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역 균형발전 저해 및 효과·효율적 도시·산업공간 공급 제한
 - 기존 울산 시가지와 울주군 사이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역 균형발전 저해 및 효과적·효율적 도시·산업공간 공급 제한
 - * 원도심(중구) 개발제한구역 면적 약 47%, 개발 포화상태로 확장에 무리
 - ** 반면 신도심(울주군)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약 20%, 적극적인 개발 고려 필요
 - 주력 산업의 산업구조 전환 어려움과 연구개발 등 지원 활동·투자 및 일자리 다각화 미흡으로 청년 인재들의 기피 현상
 - * (1인당 생산 부가가치) 36.4(전국 최하위), GRDP 대비 연구개발비 1.7%(전국 최하위)
- **(혁신자원 및 잠재력)**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제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최상위 수준*의 경제 규모 보유
 - * (지역내총생산) 69.1백만원(서울 49.6백만원), (개인소득) 25.2백만원(서울 25.3백만원) 등 양적 경제규모 및 성장률 전국 최상위 수준
 - 대규모 국가산단과 더불어 첨단산단, UNIST, 울산대학교, 울산 TP, 혁신도시 등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 분포
- **(특구 도입 필요성)** 도시구조적 한계 극복 및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도입으로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 거점 조성
 - 개발제한구역으로 이격된 원도심과 신도심(KTX인접)에 특구를 1개소씩 지정하여 지역 내 혁신자원 활용 및 광역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
 - 신도심(울산KTX역세권)은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전국 거점간 연계, 원도심·혁신도시는 지역 혁신자산의 중개 거점의 역할 수행 기대
 - 원도심에서는 기존 도심 내 혁신자원 활용 극대화할 수 있고, KTX역세권 인근 신도심과의 연계를 통해 울산의 제조 관련 산업 부가가치를 광역·국가 차원으로의 파급 가능

□ (육성 방향) 산업단지-교육기관-혁신도시의 연계축을 형성하여 지역 내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전국·글로벌 시장으로의 제조혁신 동시 지원

○ (공간 현황) KTX울산역 연접 신도심 1개소(역세권복합특화단지 일부 중복 지정), 울산 테크노파크 북측 원도심(개발제한구역 해제) 1개소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1113번지 중구 다운동 산101번지 일원

* KTX역세권융합지구(신도심), 다운혁신융합지구(원도심·혁신도시 인근)

- (면적) 1,915,820㎡(개발사업 면적 : 986,862㎡, 연계사업 면적 : 928,958㎡)

- (개발 방식) 역세권 주변 신규 개발과 기존 사업·혁신기관 연계

< 울산 도심융합특구 공간 현황 >



자료: 울산광역시, 2024. 울산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

- **(조성 목표)** 울산과 동남권 벨트의 제조 지식·기술·인프라를 산업 기반으로 성장·혁신을 도모하는 “제조·스마트 산업 혁신 발신기지”
 - 울산의 세계적 선도·강소기업의 제조 기술·인프라 혁신이 글로벌·전국 거점과 연결되는 산업·기술의 혁신 실증 허브 구축
 - 울산KTX역과 광역교통망을 활용하여 울산 원도심·산단과 전국을 고속 연계(시·공간 압축-연결)하는 동남권 교류 거점 형성
- **(추진 전략 ①)** KTX역세권융합지구 : 동남권 제조혁신의 고도화 전진기지 형성과 청년·글로벌 인재의 정주·교육·문화허브 조성
 - KTX울산역, 기 추진 KTX역세권복합특화단지(울산시-울산도시공사(주)한화솔루션)를 연계하여 광역 기능 집적거점 형성과 전국 단위 인재 유치
 - 전국 최고 수준 의료기관(울산대학교병원 등)과 국내 유일 계놈 DB·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바이오-제조혁신 정주단지 조성
 - 울산의 기존 제조 역량으로 첨단 전략산업(이차전지, 드론·UAM 등 미래모빌리티 등)을 육성하여 기업의 성장 가속화 및 기술 융복합 지원
 - 울산TP 등과 협업으로 수소에너지 공급·활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형성과 전주기 지원체계를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반으로 구축
 - 국제학교 설치·유치, 글로벌 도심형 공동캠퍼스 조성 등 국내외 우수 교육·R&D기관 집적화를 통한 정주·교육·기술이전 환경 구축
- **(추진 전략 ②)** 다운혁신융합지구 : 제조 기반 ICT 및 기후테크 산업의 혁신을 실증·확산하는 산학연 연계 허브 구축
 - 국가산단 제조 기술과 인프라를 결합하여 첨단 ICT·서비스산업 육성하고 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확보, 첨단기술 산업혁신 도모
 - 그린 수소 원천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선도하는 기후테크 산업 개발·실증 클러스터 형성
 - 특구 내 입주 희망 연구·지원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TP 등)과의 연계로 기업지원·혁신벤처 창업 촉진
 - 은퇴한 전문·기술노동자의 특화주거를 제공하고, 대학 공유캠퍼스, UBRC 연계 등 울산 산업역군의 암묵지 공유 거점 형성

□ **(운영 전략)** 울산의 미래 주력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군 육성을 견인하고, 이중산업간 융복합과 고도화를 위한 거점 확보

○ **(주요 육성 산업)**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첨단제조지식서비스, 미래 화학신소재, 저탄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

* (KTX역세권융합지구) 인근 혁신자원 현황(R&D비즈니스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니스트 등)을 고려하여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첨단제조지식서비스(AI 등) 산업 등 육성

** (다운혁신융합지구) 울산시의 산업 고도화 전략, 탄소중립연구특화사업 등 기 추진 계획과의 연계로 미래화학신소재, 저탄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육성

○ **(민간 참여)** 특구 내 국제학교 및 종사자 특화주거 관련 민간의 포괄적 개발 참여, 공원·문화시설의 민간기업 CSR 활용

○ **(기능 강화·연계)** 경제자유구역 확장으로 해외 인력의 장기거주 유도(KTX역세권융합지구), 산업 혁신 실증·확산을 위한 특구 및 지구* 중복 지정 등으로 기능 강화

*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단계별 실행계획)** 공공·민간 마중물 사업을 연계하여 특구 앵커 사업 우선 추진, 지속적 산업·정주기반 확보로 직·주·락 생태계 구축

○ **(성과 목표)** 울산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한 원도심-신도심 특구 연계 개발, 지역 내 R&D 기반 확립

○ **(1단계)** KTX역세권복합특화단지(도시개발 연계사업) 토지 조성 완료 시점에 KTX 연접 부지를 중심으로 앵커시설을 우선 확보

- **(핵심사업)**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조성 중)를 중심으로 미래형 환승센터·UAM 실증 사업 우선 추진하고, 역세권 인근의 정주기반 (특화주거, 문화·글로벌·공공지원시설) 확보

-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등 지원지구 설치로 특구 추진 기반을 확보 하고, 공공·앵커기관(울산TP, 울산시민청 등) 설치와 협력 강화

○ **(2단계)** KTX역세권융합지구, 다운혁신융합지구의 신규 개발사업을 단계적 추진·확장하여 산업·정주기반과 혁신산업 생태계 확장

- 국제학교 설치·유치, 글로벌 도심형 공동캠퍼스 조성, 경제자유 구역 지정·확장 등 해외 전문기업·인력 유입·정착을 위한 유관·연계사업을 지속적 발굴·강화

6. 특구별 핵심사업 추진 및 특화 · 연계방향

□ 각 특구별 사업 조기 활성화와 특구의 앵커링 기능 확보를 위해 우선 추진 필요한 핵심사업을 선별하여 우선 추진

○ 핵심사업은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하며,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필요한 주요 앵커기관·지원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별

< 5개 광역시(선도사업) 주요 핵심사업과 실행 전략 >

지자체	주요 핵심사업	실행 전략
대전	기업혁신·성장플랫폼 조성사업(개발) 도심융합특구 혁신플랫폼 조성사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운영·관제 및 실증화 기능 도입을 위해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및 기업·기관 지원시설 인프라 구축 - 특허 관련 공공기관 이전으로 거점 조성의 마중물 역할 수행, 앵커기업 및 유니콘 기업 이전 촉진
	- 기업혁신·성장플랫폼 조성 및 특허 관련 공공기관 이전 우선 추진	
	대전 문화테라스 조성 사업(부처사업 연계)	
	- 충남도청사 이전적지와 근대미술관분관 구축사업(문체부)	
대구	경북도청 후적지 산업혁신거점(개발+부처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지원기구(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설립을 통해 사업 운영·관리 전반을 조기에 담당하여 특구 사업의 활성화 지원 및 지속가능성 담보 - 특구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해 특구개발사업(경북도청후적지)의 개발 협의 지속 추진 및 성공적 사업 진행 기대
	- 산업혁신거점 내 문화예술허브 추진(문체부)	
	경북대학교 인재육성거점(연계)	
	- 경북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연계형 특구지원기구 신설(안)	
광주	스마트 첨단특화 생태계(개발) 의료·디지털 융합 생태계(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주요 지원기관(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우선 설립을 통한 공공의 마중물 사업 선행, 특구 기반 확충 - 민간 앵커기업 및 광주TP와의 연계를 통한 관련 산업 파생수요의 지속적 추가 유치 기대, 연관 산업 생태계 구축 - 개발사업 우선 추진이 가능한 부지를 중심으로 상무지구 추가 수요(1차)-앵커·관련 기업 특화주거수요(2차) 기반 정주여건 확보
	- 개발사업지역 내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조성	
	문화-MICE 융합 생태계(개발)	
	- 광주의료원 개발사업(보건복지부 연계), 김대중컨벤션센터제2전시장 건립사업(연계) 등 기존 사업과 연계 가능한 지원시설 우선 유치	
울산	울산KTX역세권복합특화단지 (토지조성 이후 일부 개발 추진)(민간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X울산역을 중심으로 미래형환승센터 사업 추진 및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 역세권 인근으로 혁신공간 우선 조성 - 도심융합특구 관련 지원기구 신설로 특구 조성 운영기반 확보 및 울산TP, 울산시 민청 등 공공 이전 선추진
	- 복합특화단지 토지조성 완료 시 주요 지원기구 및 기반시설 우선 설치	
	-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드론/UAM 실증센터 등 관련 인프라 조성 우선 추진(국토부)	
부산	1단계 NEO-DNA 개발사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설립을 통해 사업 운영·관리 전반을 조기에 담당하여 특구 사업의 활성화 지원 및 지속가능성 담보 - 수요조사에 따른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산재된 지역 R&D 자원 연계, 산업별 전후방 협력을 통해 지역의 미래 신산업 창출
	- 컨트롤타워 내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기업종합지원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규제자유특구지원센터+도심융합특구 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 연계(중기부)	

□ 특구 조성 시기별로 특화·연계 주요 전략 마련 추진

① (특구 도입기) 사업 우선 추진을 전담하고 앵커링 효과 창출을 위한 지원기관 설립, 각 지자체의 사업 기반 마련과 지역 특화 및 타 지역과의 차별화에 집중한 핵심 육성 사업 검토

- 도심융합특구의 안정적·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기획과 실행 기능을 갖춘 도심융합특구 전담 조직·인력 구성* 검토

* (공통)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기업종합지원센터,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주요 지원기구 신설 및 운영·관리 검토

- 지역 내 산재한 혁신 자원을 특구지원센터 및 인근 지원기관 (지자체 테크노파크, 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협업체계 구축
- 지역 내 주요 혁신자원의 역량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 특화산업 확정, 특구진흥재단을 통한 특구 간 역할 분담

* 특구 인근 대학·연구기관 및 주요 연계사업(캠퍼스혁신파크 등) 연계

② (혁신역량 육성기) 주요 전략사업 중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사업 추진 및 특구 사업의 가시화 진행

- 특구 핵심사업 조기 추진에 따른 주요 전담기관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준비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기업 이전 및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와 공간적 기반 형성
- 주요 핵심(앵커)기관 및 창업·벤처기업 입주에 따른 종사자 특화 주거 및 생활·문화 공간 조성

③ (특구 고도화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 집중 육성 및 배후공간 고도화로 직·주·락 융합의 혁신공간 육성

- 시장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이 배출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고 특구 간 연계 본격화
- 특구별 특화 분야 관련 전·후방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특구 간 협력 추진, 특구 주변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실현
- 특구 내 성장기업들이 민간 투자자·대형 수요처로 기능하고 신규 스타트업과 지속적 혁신이 발굴되는 특구의 선순환 체계 구축

7. 초광역권의 특구 활용 방향

- 산재된 산업·기술기반과 정주 인프라를 연결하여 초광역권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포함한 광역생태계를 형성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광역적 최상위 기능을 공간적으로 집적화
 - **(제도 중복지정으로 기능 강화)** 관련 제도의 중복 지정을 통해 주요 앵커기관 유치 및 기업·인재 유인책으로 활용
 - 도심융합특구법 제24조제1항* 각호에 따른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의 연계 지정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패키지형 지원 방식 활용
- * 도심융합특구법 제24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 등으로 지정·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기존 혁신기관과의 연계·협력)**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기업지원 시설, 인근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 기존 기관과의 기능연계 협력 방안 마련 및 특구 내 사업 참여 직·간접 유도, 행정 지원 등 제도적 협력체계 구축
- **(도심융합특구 지원기구* 설치)**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 및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기구의 선제적 설치로 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
- * 도심융합특구법 제26조(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제27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28조(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치·운영)
- 도심융합특구를 혁신 생태계의 네트워크 중심지로 육성하고 인근 유희부지·기존 정비구역 등을 활용해 연계형 개발 추진
 - **(거점-네트워크 체계)** 국토·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최상위 거점 계획으로서 도심융합특구와 특구 간 연결 구조가 유효
 - **(광역생태계 확산)** 지역 불균형 해소의 핵심 거점 육성을 위해 인접 도시와의 산업 및 경제적 연계로 초광역 경제권 형성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혁신)** 산업·자원 공유를 통한 인접 도시와의 협력 증진으로 효율적 자원 활용 및 산업 클러스터 형성 촉진

□ 초광역권 내 흩어져 있는 산업단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혁신 자원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특구의 플랫폼 기능 강화 추진

- 특구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주변 지역 기업과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지원·협력사업 운영

① 전략 1 : 개방형 R&D 및 기술사업화 허브

- (광역 공유형 테스트베드 및 장비센터) 개별 중소·벤처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고가의 첨단 연구장비(예 : 반도체 클린룸, 바이오 분석 장비, UAM 실증 시설 등) 및 테스트베드를 특구 내 집중 구축

*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광역권 내 모든 기업이 멤버십 기반의 저렴한 비용으로 예약·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광역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허브) 진흥재단 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TLO) 설치, 기술공급자와 수요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 수행

* 지역 내 흩어져 있는 우수기술과 특허를 DB화하며, 기술가치평가, 특허포트폴리오 컨설팅, 기술금융 연계, 사업화 모델개발 등을 제공

- (규제샌드박스 운영) 규제기관과의 창구역할을 진흥재단을 중심으로 단일화하여, 신기술·신제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원스톱 지원

* 특구 내 초기단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업모델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 진단 및 선제적 대응전략 컨설팅

② 전략 2 : 광역권을 아우르는 인재양성 및 교류거점 기능

- (공동캠퍼스 및 기업연계 학위과정) 복수 대학 컨소시엄을 통해 특화산업 분야 석·박사 과정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커리큘럼 설계, 강의, 프로젝트 지도에 지역산업 주체가 직접 참여하여 산업 현장과 교육의 부조화를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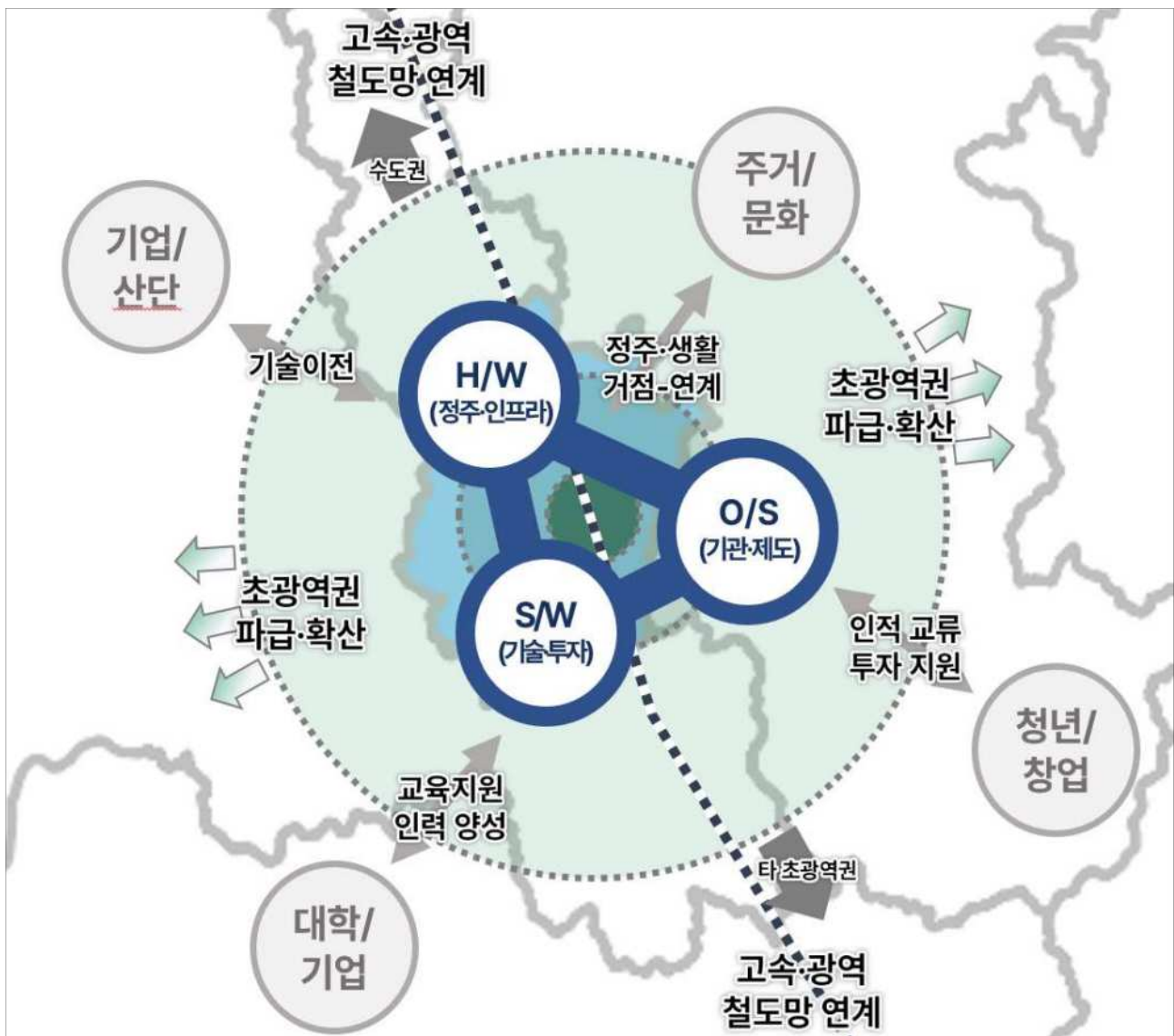
- (광역 인재교류 프로그램) 특구 입주기업-주변 산업단지 기업-대학 연구실 간에 연구인력 및 실무인재를 상호 파견·교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산업 재직자 전환교육)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재직자 대상 리스킬링 부트캠프 운영

③ 전략 3 : 초광역권 협력 네트워크 및 브랜드 구축

- (도심융합특구 네트워크 설립 및 운영) 특구 및 광역권의 기업, 대학, 기관, 투자사 등이 성장·혁신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식적인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태계 형성
- (글로벌 게이트웨이) 지역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이 전국·글로벌 연계의 창구가 되어 주요 특화산업 클러스터간 교류·협력, 국제 R&D 프로젝트 유치, 해외 우수인재 및 기업유치 활동 전개
- (중소도시와 경제·생활권 연계 강화) 특구와 주변 중소도시 간 정보기술 기반 산업 및 문화 기능 등의 연계를 통해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 도모

< 도심융합특구 기능 연계 거점 형성 및 초광역권 연계 >



□ 도심융합특구가 초광역권 거점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구 간 뿐 아니라 주변 광역지자체와 혁신역량 연계로 기능 확장·강화

○ **(대경권)** 대구도심융합특구-대구경북경자구역-대구혁신도시-대구연구개발 특구-지역대학·연구기관 연계로 혁신 산학협력 및 벤처 생태계 조성

- 초광역권발전계획 공동 수립,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초광역 상생 협력 포럼 등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며 초광역 협력사업 지속 추진

* 지자체-대학 상생협력 기반 구축 : 지역혁신사업(RIS)의 체계적 운영 및 지역혁신중심대학 (RISE) 사업체계 구축·운영

* 혁신거점 조성 : 대구 맞춤형 기회발전특구, 대구 AI 로봇 글로벌혁신특구 유치

○ **(동남권)** 부산·울산도심융합특구-부산연구개발특구-울산·창원·김해·진주강소특구 등과 R&D 협력 및 사업화 인프라 연계·활용

- 부산·울산·창원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및 제조·수소 벨트 구축과 부울경의 새로운 국제관문으로 가덕도신공항 및 남부권 광역 관광벨트를 연계하여 기능 확장·복합화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및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김해-양산-울산) 건설로 부울경 초광역 연계 및 접근성 확보, 부울경 수소 버스 공동구매·보급·운영 및 수소 배관망·충전소 구축

○ **(중부권)** 대전도심융합특구-대덕연구개발특구-세종국책연구단지-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산업 연계로 충청권 혁신역량 강화

* 미래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 2대 도전산업(반도체, 데이터), 5대 전략산업(모빌리티,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헬스케어산업 등), 2대 기반산업(광융합·가전 및 스마트뿌리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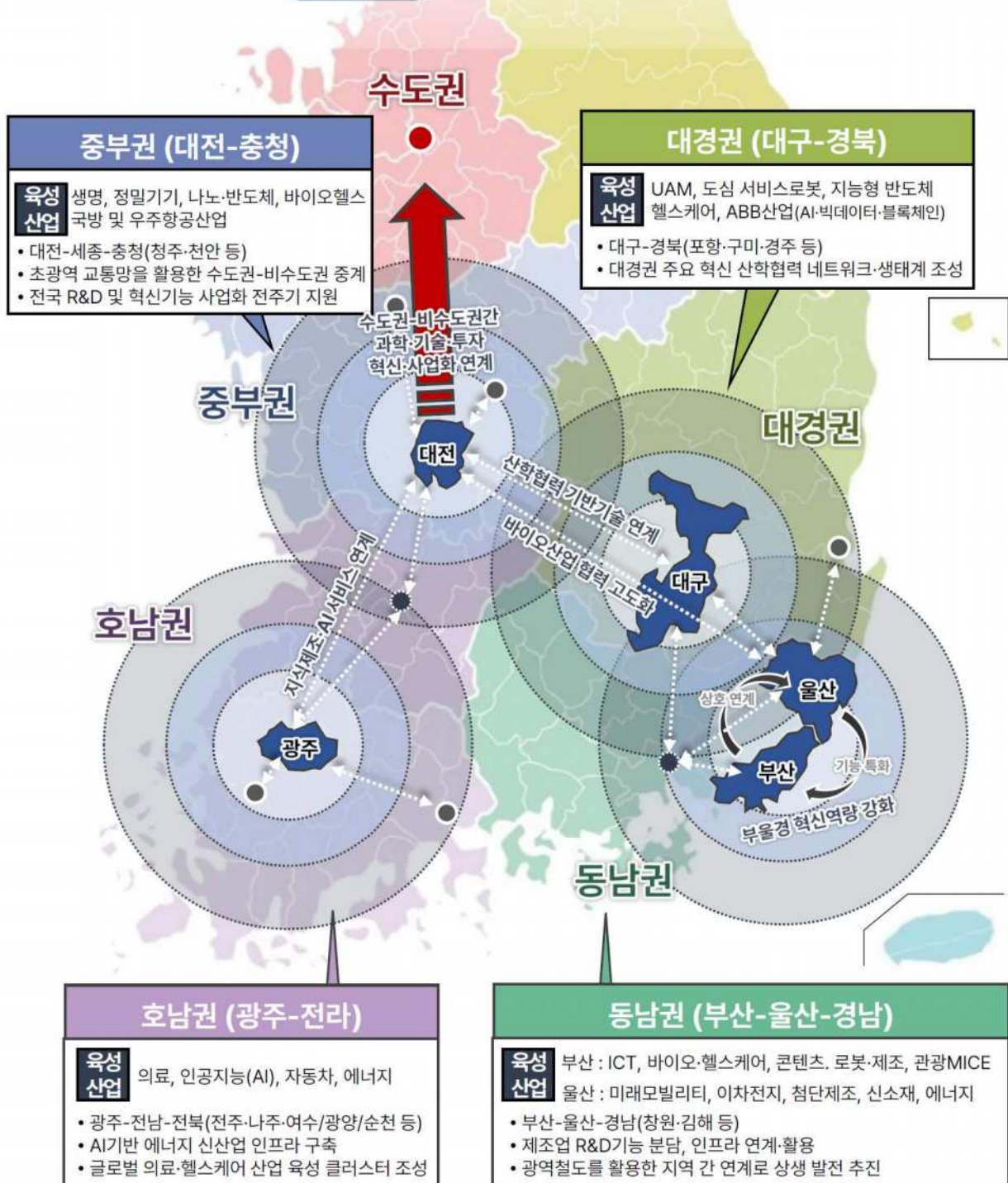
○ **(호남권)** 광주도심융합특구-광주연구개발특구-나주강소특구-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연계로 미래 혁신산업 성장 주도

- 스마트 에너지 분야(고효율 태양광,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광주-나주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교류·협력하고 핵심분야 사업화 공동 추진

* 광주-나주특구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협의체(기술혁신분과, 사업화분과 등) 운영을 통해, 에너지분야 정보 공유 및 협업 프로젝트 기획·추진

* 광주군공항특별법 제정에 근거한 이전 가속화(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로 군공항 인근 개발부지 확보,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 추진 시 전남권 연계 강화 기대

< 초광역권간 도심융합특구들의 기능 및 역할 연계 >



V. 사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1. 주체별 역할

- 주체별 역할 강화와 협력을 위해 사업시행 및 주체 다각화를 통한 각 주체의 전문성·창의성 활용, 국가·지자체·지원기구 간 협력체계 확립

① 중앙정부

- 타 특구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세제·규제혜택 확대, 국유재산 활용, 사업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기회발전특구, 글로벌혁신특구, 교육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중복 지정을 통해 세제·규제 혜택 및 특례 강화
 - 특구 내 국유지 장기임대(최장 50년), 수익계약 처분·대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통한 사업 지원
 -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도심융합특구 맞춤형 규제 완화 추진
-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각 부처 정책사업을 도심융합특구와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 제공
 - ※ 범부처 협력사업 목록은 [참고]로 제시(p.87)
- 부처별 보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특구에 활용하기 위해 부처 간 공동 협의·활용 및 절차 간소화 추진
 -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포함되는 국공유지 활용 시,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부처 간 공동 활용·연계를 검토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국유재산 심사·활용

< 범부처 지원 사항 >

기 관	지원 사항
지방시대 위원회	각 부처의 지방 성장거점을 지원하는 사업이 연계·결합되어 도심융합 특구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기획재정부	핵심 앵커시설 건립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간소화 또는 면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중복 지정으로 교육 연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벌대학30 사업과 연계해 특구를 산학연 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에 확산되도록 하고, 디지털혁신지구를 조성하여 디지털 기업 및 인재 육성 사업과 디지털 기술개발 사업 등을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원스톱 기업 지원체계를 통해 특구 이전·입주 기업의 행정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문화체육 관광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및 문화도시 지정 등을 통해 문화 창조·향유 여건을 제고하고, 국립 문화시설 분관 유치 등을 통해 품격 있는 정주·문화 환경을 조성
산업통상부	기회발전특구 중복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등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 지원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
국토교통부	도시혁신구역 등 도시계획 특례 연계로 고밀·복합 개발을 지원하고, 인재 유치를 위한 종합적 정주 여건 개선 체계 구축
중소벤처 기업부	글로벌혁신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특구 내 집중 배치하며, 지방시대 벤처펀드와 연계해 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스타트업파크, 팁스타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② 지자체

- 지자체 권한에 기반한 인허가 의제처리 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재산 활용 등 지자체 권한 내에서 도심융합특구 맞춤형 혜택 제공 및 행정적 지원 강화
- 「도심융합특구법」 인허가 의제 적용을 위한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 및 승인 절차 신속화

-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조례 제정
- 특구 내 공유지 무상사용 허가, 장기임대(최장 50년) 제공을 통한 사업비 절감,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 공공기여 조정 등 민간참여 촉진
- 지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기업·금융기관 연계 및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민간 투자 유치 강화
- 지역대학, 연구기관, 혁신기업, 공공기관 등 산학연 혁신주체들을 특구와 연결하고 소통과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 지역 은행·신용보증기관과의 금융협력 및 대학·연구소의 기술·연구역량을 활용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추진

③ 사업시행자

- 「도심융합특구법」 제14조에 근거한 민관공동 SPC 방식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완화 및 민간의 사업경험 활용 등 사업주체 다각화
- 민간이 50% 미만 출자하여 공공이 주도권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자본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민관 공동 개발사업 추진
- 민간개발사, 금융기관 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을 바탕으로 복합개발, 앵커시설 건축 등 수익성 사업을 담당
- 특구 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주기업 맞춤형 시설 운영, 네트워킹 지원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적 운영 역할 강화
-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 장비·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통신, 전력, 냉난방 등 기본 인프라 제공

④ 지원기구

-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종합적 관리·지원), 기업종합지원센터(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규제특례 전문 지원) 등 전문 지원기구 설치를 통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특구 조성·활성화 지원, 투자유치, 미래 혁신산업 사업화 촉진 등 특구 전반의 종합적 관리·지원
- (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산학연관 연계 공동기술 개발, 연구시설·장비 공동이용 등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관련 법률 연계 임시허가·실증·규제특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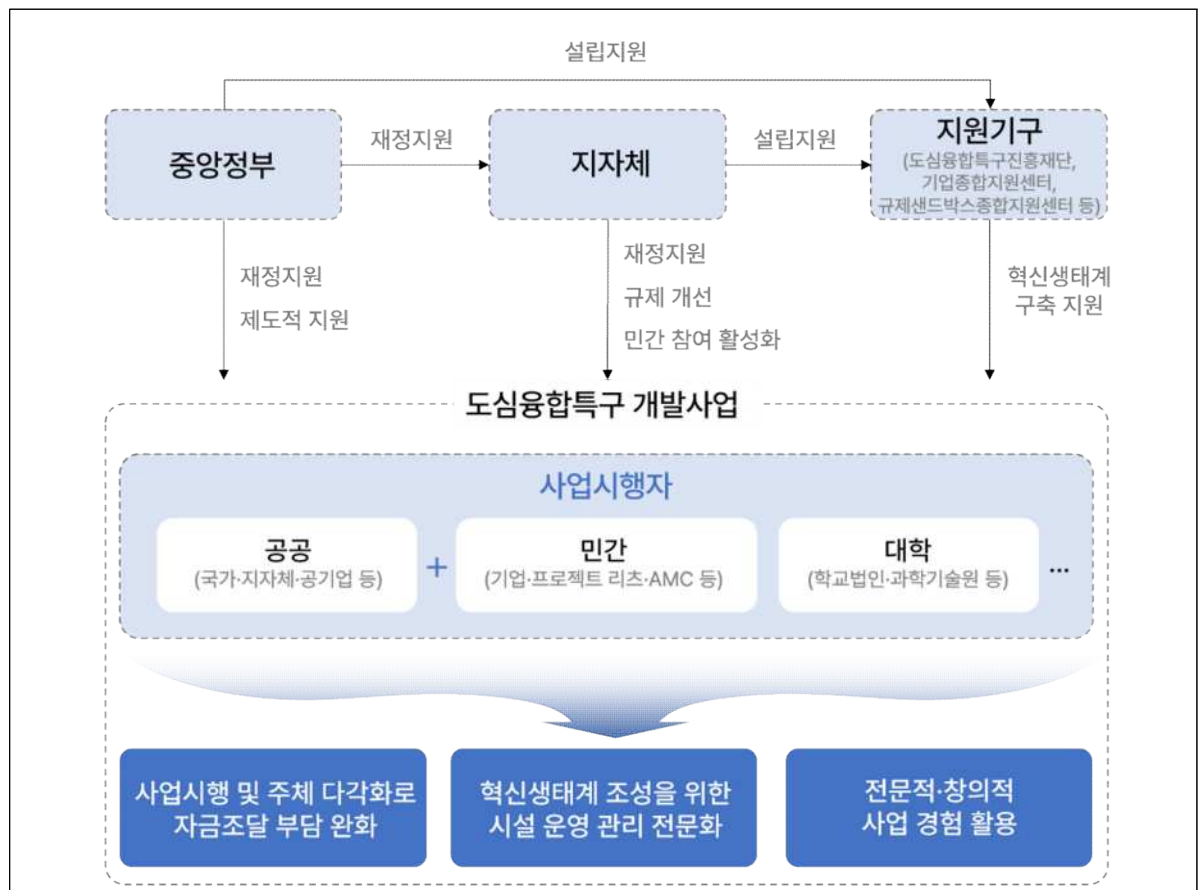
*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 가능

○ 각 기관의 전문성에 기초해 입주기업 유치, 혁신·육성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지원 등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원

- 앵커기업·스타트업·연구기관 등 다양한 혁신 주체 발굴 및 유치 활동
- 기술개발, 창업지원, 투자매칭 등 혁신 촉진 프로그램 기획·운영

*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과 지역 엔젤투자기관 연계를 통해 입주기업 대상 투자 및 컨설팅 통합 지원으로 혁신 생태계 활성화

< 주체별 역할 강화 방안 >



2. 사업 시행 방안

- 추진 동력과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❶공공 주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❷일괄추진에서 단계적 추진방식으로 개선하며, ❸부처협업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혁신기반 마련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유도

❶ 민관협력, 기업주도, 대학주도 등을 통한 다양한 사업시행방식을 도입하여 민간 및 전문 주체의 전문성·역량 적극 활용

○ (공공/민관협력형) 창업지원센터, 공공임대주택, 리빙랩, 공동 캠퍼스, 지역 의료원,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앵커시설 중심으로 설치·운영

- (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공이 출자한 법인

- (방식) 도시/산단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❶ 공공사업시행자 단독 (또는 공동) 사업시행, ❷민관공동SPC(공공 지분 50% 초과) 설립·추진

○ (기업투자 연계형) 서울 서초·마곡, 기업혁신파크(포항, 거제, 춘천 등)와 같이 앵커기업이 투자와 연계를 통해 업무·R&D 단지와 복합정주·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심융합특구 운영에도 참여

- (시행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할 민간기업

- (방식) 특구개발 사업시행자와 특구개발사업 대행계약(「도심융합특구법」 제14조)으로 사용할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 추진

< 기업투자 연계형 대표 사례 >

❶ LG사이언스파크(서울 마곡)



연구개발 기능 집적 + 문화·상업 복합 연계
→ 국가 단위 혁신 생태계 핵심 거점

❷ 도요타 우븐(Woven)시티(일본 시즈오카현)



연구개발 + 에너지·모빌리티 실증 + 정주문화
→ 글로벌 단위 첨단기술 혁신·실증 핵심 거점

- **(대학주도형)** 지역거점대학·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기술원 등)이 주도하여 창업지원센터, R&D센터 등 조성하거나 공동 캠퍼스 설치·운영

- **(시행자)** 국립대학법인, 사립학교법인, 과학기술원

- **(방식)** ①대학이 주도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대학 외 부지(도심융합특구 일부 사업구역)에 첨단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거나, ②캠퍼스혁신파크 등 대학이 보유한 토지에 시행하는 정책사업을 도심융합특구와 결합 추진

② 대규모 일괄 개발에서 단계별 분할 개발로 추진방식을 전환하여 조기 사업 성과 창출 및 리스크 분산

- **(단계적 개발)** 전체 구역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여건이 조성된 지역부터 우선 착수하여 전체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

* (예시) 1단계(기반시설·앵커시설) → 2단계(기업 유치·입주) → 3단계(확장·고도화) 순차 추진

- **(앵커시설 우선 추진)** 정책 효과의 조기 가시화와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앵커시설 우선 추진

③ 특구 브랜드화 및 홍보 강화

- 초광역권의 중추 혁신·일자리 공간 거점으로 인지되고, 지역별 특화 브랜드를 갖도록 공간·정책적 브랜딩과 홍보 확대

- **(정부)** 부처 협력사업 특구 활용 확대 및 경험·성과의 교류 기회 제공

- **(지자체·사업시행자)** 사업 시행 및 운영 단계의 공간 브랜딩과 홍보 강화

3. 재원 조달 방안

- 다양한 금융기법과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재원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다각화하는 종합적 재원조달 체계로 전환

① 정부 재정지원 확대

- (국비 지원) 기반시설 및 핵심 앵커시설(공공건축물)에 대한 기존 재정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 지원체계 강화 방안 마련
- (기금 및 펀드 활용) 주택도시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활용을 통한 장기 저리 용자로 자금조달 부담 완화

* 도시재생사업 등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자체 신용·자산 기반 재정지원

- (신용보강 활용) 지자체 신용도를 활용한 저금리 채권 발행 지원으로 민간 자금 조달 비용 절감 및 사업 경쟁력 강화
 - 지자체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채권 발행 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 신용 리스크*를 분산하여 자금 조달·금리 조건 개선
- (자산 활용 다각화) 공유지 사용·처분, 현물 출자,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한 지자체 보유 자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사업비 절감 지원
 - 「도심융합특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수의계약 처분, 장기 대부(최장 50년),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특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공자산을 민간 사업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

③ 순환형 재정지원체계 구축

- (기금 및 특별회계 활용) 지역개발기금 활용 및 신규기금 조성을 통한 순환형 재원조달 방식을 통해 재원조달과 사업 안정화 추진

- 지역개발기금이 조성된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용자 대상에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을 추가해 사업초기 저리용자 지원
- * 지역개발기금이 없는 지자체는 특구 전용기금 신규설치 후 저리용자 지원 추진
- 저리 대출 제공 후, 특구개발로 인한 조세증가분 일부를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에 적립해 기금 이자비용 지원

④ 다양한 사업 금융 활용

- **(선매입형 토지개발펀드)** 미래 개발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투자 모델로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및 임대 수익(예 : 100년)을 산정하고, 현가화된 총 이익의 70% 수준(예시)의 규모로 펀드 유치
- 선매입형 펀드는 토지·시설의 미래 개발가치에 기반해 선투자를 유도하고, 사업완료 시점의 수익(매각, 임대 등)으로 투자 회수
- * 공공이 일정 지분을 출자해 사업 초기 리스크를 분담하는 초기 재원으로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 투자 유인을 향상
- **(금융주체 다각화)** 프로젝트 리츠, 자산운용회사(AMC) 등 전문 민간사업자가 기획-건설-운영 전 과정 참여
- 시장금리 대비 저리 용자로 투자 수익성을 개선하고, 전매제한 조건 부여로 투기를 방지하면서 실수요 기업 중심의 공급 추진
- **(토지선분양)** 착공 전 계약금 10% 수준 선조달을 통한 초기 자금 확보와 취득세(4.6%), 개발부담금 감면을 통한 민간 부담 완화
- HUG 분양보증, 분양관리신탁 도입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및 투자 리스크 관리

VI. 운영 및 성과 평가 방안

1. 주요 운영 주체 및 체계

□ 도심융합특구 운영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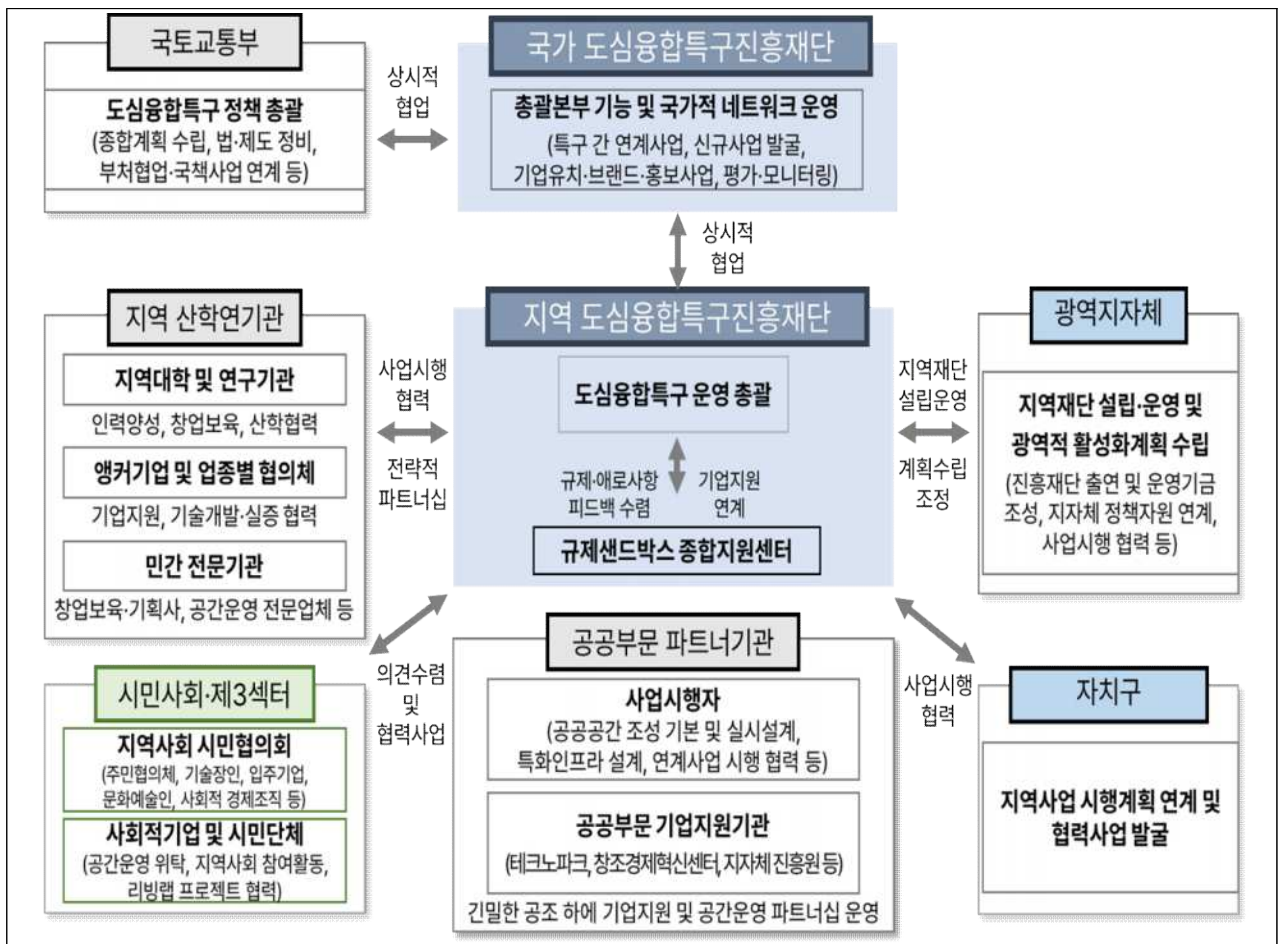
- 도심융합특구의 국가적 정책 추진과 지역의 자율적 실행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지역 단위 진흥재단 설립하여 운영
 - 도심융합특구의 실질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가 설립하는 지역별 도심융합특구 진흥재단 중심의 운영모델 구축
 - 개별 특구의 성과가 국가적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총괄기구인 ‘국가 도심융합특구 진흥재단’ 설립
- 국가재단과 지역재단은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주도 혁신을 체계적으로 촉진
 - 국가 진흥재단은 전국 특구의 전략적 방향을 조율하고, 특구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며, 범부처 지원을 이끄는 구심점 기능
 - 지역 진흥재단은 기존 사업시행자,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산·학·연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총괄 조정하는 허브 역할

□ 국가·지역 진흥재단의 역할 및 기능

- 국가 재단은 전국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 추진 전략본부로 운영하며, 균형성장 차원에서 각 사업의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역할 수행
 - (국가전략 수립 및 브랜드 관리) 특구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통일된 사업 정체성과 홍보전략 수립
 - (정책조정 및 규제개선) 중앙부처와 지역특구 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규제특례 사무를 관장하는 공식 창구역할을 수행

- (초광역 연계사업 기획 및 총괄) 전국 특구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광역 연계사업을 기획하고 성과를 관리
- (성과관리 및 지식확산) 특구 공통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관리하고, 특구별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환류
- (국가 재정 유치) 중앙정부 예산확보 및 관련펀드 조성, 민간자본 및 정책금융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유치(IR) 활동 전개

< 국가 및 지역 도심융합특구 진흥재단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상 >



- 지역 재단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도별로 설립하고, 사업기획, 개발, 운영, 활성화 등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실행기관 역할 수행
- (지역계획 수립·집행) 특구 기본·실시계획의 이행을 총괄하며, 국가 전체 전략과 지역특화 방향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
- (지역 혁신생태계 육성)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파트너십을 구축·운영하는 총괄기획자 역할 수행

- **(기업성장 지원)**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R&D 지원연계, 테스트베드 제공,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기획·실행
- **(인재양성 및 유치)** 특구의 특화산업에 맞는 인력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인재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지원
- **(복합적 사업조정)** 주택·산단개발, 도시정비 등 상이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들을 조화롭게 연계시키는 기획 및 조정자적 역할 수행
- **(자산관리 및 재원운영)** 앵커시설, 공유공간 등 핵심자산을 관리·운영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지자체 출연금 등 지역단위 재원 조달·집행

□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설립 및 기능 강화 방안

- 진흥재단은 초기단계에서는 지역 전문기관에 기능을 위탁하고, 특구가 성숙함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설립 방식 허용
- 민간 전문성 활용을 위해 핵심 프로그램을 액셀러레이터나 자산관리회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성과 기반 위탁운영 적극 도입
- 지역재단이 특구사업의 기획·개발·운영의 전체 주기에서 총괄 기획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과 자율성 부여
- **(기획·조정)** 민관협력사업(PPP) 구조를 설계·주도하며, 특구개발을 위한 SPC에 직접 출자하고 지분을 참여할 권한을 부여
- **(사업·자산관리)** 앵커시설 및 공유공간 운영권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이들의 성과를 관리·감독하는 권한 부여
- **(기업·인재지원)** 기업 지원사업 운영과 기술성과 이전·사업화하는 전담조직(TLO)을 운영, 투자유치(IR) 및 펀드 연계활동 주도
- 진흥재단이 복합개발과 민간운영을 아우르는 전략조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실질적 권한 확보
- 기획, 사업시행, 재원조달, 공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자산관리, 투자자 매칭, 플랫폼 구축 등 재단의 업무범위 확장

2. 지속성 확보 및 거점 기능 확대 방안

□ 기본 방향

- 도심융합특구가 혁신과 성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다음의 운영전략을 단계적 추진
- **(특구 활성화)** 특구 내 입주기관, 기업, 인재집단 성장을 지원하고 교류를 촉진해 자생적인 혁신 커뮤니티 구축
- **(광역거점 기능강화)** 특구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광역권 전체의 혁신자원을 연결·확산시키는 플랫폼 역할 수행
- **(광역특구 간 연계)** 전국의 도심융합특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국가적 규모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도심융합특구 활성화 및 거점기능 확대운영 방안 개요 >



□ 특구 내부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 특구 내 입주기관과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입주기관 성장지원 패키지)** 임대료 감면, 세제혜택 등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법률·회계·특허 등 전문서비스 원스톱 지원

- **(특구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특구의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
 - * 앵커기업 및 중견기업과 연계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에게 기술 검증(PoC), 공동사업화, 전략적 투자유치 기회 제공
- **(혁신 커뮤니티 구축)** 기술세미나, 투자설명회(IR), 데모데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격의 없이 교류하는 소셜믹서, 문화행사 등 개최
 - *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소속감을 부여하고 공유인프라 우선이용, R&D 바우처 신청자격, 네트워킹 행사 우선참여권, 글로벌 파트너십 연계 지원 등의 혜택 부여

□ 광역적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 광역권 내 흩어져 있는 산업단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혁신 자원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특구의 플랫폼 기능 강화 추진
- **(개방형 R&D·사업화 허브)**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전문장비·실증 환경 공유체계, 규제샌드박스 등이 집적된 광역적 지원사업 운영
- **(인재양성 및 교류거점)** 공동캠퍼스와 기업연계 학위과정, 광역 인재교류 프로그램, 지역산업 연계형 재직자 전환교육 등 운영
- **(초광역 협력 네트워크)** 특구 및 광역권 산학연 주체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해외진출·국제협력 지원을 위한 게이트웨이 기능 확보

□ 광역특구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 개별 도심융합특구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확보
- **(광역연계형 R&BD)** 복수의 도심융합특구에 소재한 산학연 컨소시엄이 공동 추진하는 경쟁형 R&D 프로그램 추진
- **(특구 통합 기술·사업화 플랫폼)** 전국 특구의 기술, 인재, 투자 정보를 한곳에 모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
- **(인재 및 기업교류 활성화 사업)** 특구 간 지식과 경험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인력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

3. 성과 평가 체계

- 도심융합특구의 발전을 위한 운영 성과 평가를 체계화하여, 종합 발전계획 수립·변경과 특구별 행정적·재정적 지원 검토
-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된 3대 추진전략 등과 매칭될 수 있는 주요 성과의 부문과 이를 위한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
 - (직·주·락 복합공간 조성(H/W)) 청년·여성·창의인재 선호에 부합하는 공간 플랫폼 조성 및 정주·생활·문화 개선 평가
 - (기업·인재 지원체계 구축(S/W)) 기업·기술 투자를 위한 전후방 기업·인재 지원체계 구축 및 성장 효과 평가
 -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O/S)) 도심융합특구의 광역권 성장·혁신 역할 수행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점검 및 평가

< 성과평가 부문 및 기준 >

평가부문	관련 정책목표	성과평가 기준
직주락 복합공간 조성	청년·지역인재의 정주·일자리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내 정주·생활·문화 접근성이 우수한, 인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는가? -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하고 인재를 유치하는 거점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기업·인재 지원체계 구축	기업·기술투자의 통합 지원 앵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내 기업을 유치하고 성과를 확산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였는가? - 특구 내 인재 육성, R&D 활용, 투자 금융을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기업 지원체계를 잘 구축하였는가?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메가시티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권 성장·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는가? -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추진체계는 잘 이뤄져 있는가?

- 장기적 성과 주기를 갖는 특구 사업의 속성을 고려해 계획기간을 3단계로 구분한 성과관리 체계 운영
 - (성과평가의 단계) 1단계(기반시설·앵커시설) → 2단계(기업 유치·입주) → 3단계(확장·고도화)로 단계적 성과 관리

* 1단계(투입·과정지표 중심), 2단계(과정·산출지표 중심), 3단계(산출·결과지표 중심)

< 성과 평가 지표(안) >

핵심 목표	성과평가 지표
직주락 복합공간 조성	(1단계) 특구 내 생활 SOC(보육·의료·문화) 공급률, 특구 내 특화주택(청년·신혼·기숙) 조성률,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인프라 구축률
	(2단계) 특구 내 통근 시간 현황, 특구 내 생활 SOC 이용 현황, 특구 내 문화체육시설 이용률, 특구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특구 내 청년·여성층 순유입(면적당), 커뮤니티/문화 프로그램 런칭 수
	(3단계) 정주환경 만족도, 청년·여성층 임대료 부담률, 특구 내 청년·여성층 정착률
기업·인재 지원체계 구축	(1단계) 부처별 연계사업 체결 건수, 핵심 앵커시설 조성률 및 가동률, 특구 내 앵커기업 입주 수
	(2단계) 특구 내 기업 입주 수(면적당), 특구 내 앵커 시설 활용 현황(이용자 수), 타 부처 재정 지원 규모(면적당), 특구 내 기업 특허 출원 건수(지식재산 집약도), 특구 내 일자리 연계 매칭 건수, 특구 기업 민간투자 액수(기업당)
	(3단계) 특구 내 기업 매출 성장률, 특구 내 창·폐업률, 특구 내 일자리 구조 변화 추이(고부가가치 산업), 특구 내 총·청년·여성 고용율(면적당), 특구 기업 수출 실적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1단계) 도심융합특구 진흥재단 설치 유무, 도심융합특구 진흥재단 기금조성 현황, 타 특구와의 중복 지정 여부 및 현황
	(2단계) 특구 내 광역권 연계사업 체결 현황, 특구 내 광역 공동R&D(대학, 출연연, 기업 등) 수주 현황, 광역권 주체들과 특구 간 협업 건수
	(3단계) 광역권 내 산업 구조 변화 추이(종사자 및 사업체 수), 특구 내 규제 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활용 현황

- 성과관리는 특구재단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하며, 지역별 도심융합특구의 성과지표 수집, 분석,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성과환류 등 수행
- **(성과평가의 주기)** 도심융합특구의 성과평가는 기반시설 조성, 기업·인재 유치, 확장·고도화를 반영하여 5년 주기로 시행
-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단계별 성과평가 결과는 종합발전계획 수립·변경에 활용되며, 특구별 미진한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 강화, 사업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연차별 모니터링)** 원활한 특구별 현황분석 및 성과평가 자료 구축을 위해 지원기구는 매년 성과평가 지표 수집·구축을 이행

VII. 기대효과 및 미래상

1. 계획의 기대효과

□ 지자체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주요 기대효과 추산

○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투자에 따른 투자효과에 한정하며,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효과로 구분하여 정책 효과 파악

- (생산 유발) 사업의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 등) 발생 시, 타 산업의 생산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

- (부가가치 유발) 사업 시행에 따른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총 부가가치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파악

- (고용 유발) 사업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정책의 고용 창출 효과 측정

○ 지역별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5개 지자체) 추진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생산유발효과 약 19조 9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9조 4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12만 명 창출할 것으로 예상

- 각 지자체별로 생산유발효과 약 3조 5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조 5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1~3만명 수준의 효과* 기대

* 기대효과는 기본계획에 승인된 사업비를 바탕으로 추산되었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사업 기간과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추정치는 변동될 수 있음

< 도심융합특구 지자체별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안) >

사업 효과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총합
생산유발효과	3조 5백억 원	3조 6백억 원	3조 8천억 원	6조 5천억 원	3조 5천억 원	19조 9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3천억 원	1조 4천억 원	1조 6천억 원	3조 5천억 원	1조 6천억 원	9조 4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1만 3천 명	약 2만 1천 명	약 3만 2천 명	약 3만 명	약 2만 4천 명	약 12만 명

자료: 지자체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참조(광주광역시의 경우는 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산)

2. 미래상

□ 지방 초광역권 거점도시의 산업 특화 및 고도화를 촉진하여 혁신과 성장을 통한 균형성장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혁신의 인재와 기업의 지역 착근 유도

○ ①초광역거점 형성, ②혁신산업 육성, ③직·주·락 거점 형성을 통해 초광역권의 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상에 부합하는 특구 형성

① (초광역거점 형성) 대전환기 국토 공간구조를 압축과 연결 체계로 재편하여 주요 지방 거점도시들의 질적 성장과 파급효과 창출·확산

- 자립 경제기반을 갖춘 초광역권 광역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비수도권 성장동력 마련
- 거점(Compact)과 연계(Network) 전략 도입으로 초광역권 거점의 경제·산업 혁신 가속화와 광역 교통망을 활용한 파급효과 확산

② (혁신·성장생태계 육성) 지역 기반산업의 고도화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역량 확보와 초광역권 간 연계 협력으로 혁신·성장 극대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기술 발전을 적극 수용하고, 지역 기반산업의 고도화 및 혁신 기능 주입을 통한 역량 발전
- 광역거점 간 다양한 연계·협력으로 자유롭고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회복탄력성 확보

③ (직·주·락 거점 형성)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 구상으로 누구나 오래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환경 조성

- 광역거점에 적합한 고밀도 복합 공간 및 직·주·락이 결합된 정주 환경을 구축하여 특구 거주민과 방문자들의 삶의 질 개선
- 다양한 특구 종사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특화 주거 및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차별화된 거점 공간 확보

[참고] 범부처 협력사업 목록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개발사업	국토부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창업·벤처기업 등에 저렴한 기업임대 공간 지원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주택	청년창업인, 산단·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변 시세의 72~80%로 주택 공급
	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기업임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성장센터 건축 토지매입비 지원
	국토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新서비스·기술 및 리빙랩을 통해 도출된 솔루션을 도시공간에 접목하여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국토부	환승센터 구축지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 국비 지원
	국토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교통거점에 문화·상업·업무시설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밀도 상향 및 사업비 지원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복합환승센터·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및 규제특례(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등)
	국토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동별(또는 단지별)로 매입·임차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저렴하게 임대 하거나 기숙사로 직접 운영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노후공공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환기시스템 설치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에너지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건축비 절감과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지원
	중기부	스타트업파크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하는 창업 집적 공간 조성
	중기부	팁스타운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을 받고있는 창업팀과 엑셀러레이터가 교류·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집적 공간 조성
	문체부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창작·창업센터, 영상제작 타운, 박물관, 페스티벌 등이 어우러지는 K-콘텐츠 대표 명소로 육성
	문체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 재생	폐교·폐교도소 등 유휴시설 문화공간재생
제도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지역전락사업의 육성을 위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
	국토부	혁신성장진흥구역	구역 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등, 기업·대학·연구기관에 기술 개발 및 산업 실용화 비용 지원
	국토부	(공간혁신 3종) 도시혁신구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축물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구역
	국토부	(공간혁신 3종) 복합용도구역	주거·상업·산업·교육·문화·의료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타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국토부	(공간혁신 3종)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토록 입지 가능지역 확대, 밀도 완화
국토부 등	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교통유발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기재부	국·공유지 사용 특례	사용기간·사용료에 특례를 부여하여 적은 예산 으로 지가가 높은 도시에 기업지원시설 등을 조성
기재부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이전 기업에 세제 감면 또는 이연 혜택 부여
기재부	지방이전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최대 10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기재부	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한 중소기업, 벤 처기업 대상 법인세·소득세 5년간 25~50% 감면
기재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투자시 소득공제	벤처기업·창업기업에 투자 시 투자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세제·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 으로 제공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사업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각종 규제 완화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수도권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투자보조금 지원
산업부	국내복귀기업 지원	2년 이상 운영하던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부분 축소하고, 국내에 유사업종을 신·증설한 경우 조세감면, 투자보조금 등 지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
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 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
중기부	지방이전 중소기업 우대보증	수도권 소재 주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 기업의 이전 경비, 이전 후 3년 이내 소요되는 운전자금·시설자금에 대해 우대보증
중기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선정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 지원 시 촉진지구를 우대 지원
중기부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대학, 연구기관 내 집적지역을 지정하고, 건축제한 완화(공장설치 허용 등), 취·등록세 감면(50%)
과기 정통부	연구개발특구	특구 소재 중소·중견기업, 대학 등에 대해 기술 발굴 및 사업화, 기업창업 및 글로벌시장 진출, 지자체 R&D 지원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 하는 체제
국조실	규제샌드박스	ICT·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 접수를 통합 운영하고 상담·법률검토·부처협의 지원
행안부	지방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는 기업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및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 면제
조달청	혁신제품 패스트트랙	혁신제품 선정 시 3년간 수의계약 및 공공기관의 제품 시범구매 신청 가능

지원사업	중기부	초격차 1,000+ 프로젝트	초격차 10대 분야* 업력 10년 이내 기업(*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친환경 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에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2조원 규모 펀드(모태펀드와 대·중견기업, 금융권 등이 공동으로 4년간('24년~'27년) 2조원 조성) 조성하여 딥테크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
	중기부	지방시대 벤처펀드	2025~2027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조성되어 지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부·지자체·민간 공동 펀드(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년 내 최소 1개 이상의 벤처펀드 조성)
	중기부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Pool을 구축하고,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매칭·협력을 지원
	중기부	밸류업 펀드	국내외 대·중견기업이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및 투자 시 매칭방식으로 투자
	중기부	도약(Jump-Up) 프로그램	우수 中企 100개사 선정, 디렉팅·오픈바우처·네트워킹 및 연계지원(자금·수출·R&D 등)을 통해 신사업·신시장 진출과 스케일업 지원
	중기부	「레전드 50+」 2.0	지자체가 기획한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자금·수출·R&D 등을 포괄지원
	중기부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인구감소(관심)·농촌지역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육성
	중기부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중기부	특화창업패키지사업	신산업분야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비수도권(예비)창업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	성장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기술개발(R&D)을 3년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고, 후속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는 모태펀드에서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최대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기부	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체험 실습,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 촉진 및 창업 성공률 제고
	중기부	창업보육센터	대학·연구소 등에 설치, 초기창업자에게 사업 공간, 경영·기술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 소요자금 지원 최대 1억원 및 창업 교육·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자금지원, 재창업자 전용 입주공간 제공, 역량강화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자체 프로그램 연계, R&D 사업 우대 등 지원(매년 200개사)
	중기부	지역특화산업육성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게 1년 이내(최대 3년)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마케팅, 디자인 등 지원

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산업단지를 디지털화, 무탄소화, 에너지 자립화 하여 경쟁력 있고 환경친화적인 제조공간으로의 전환
산업부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문화선도 산업단지	각 산업단지의 주력업종 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상징물(랜드마크)을 구축하고, 문체부·산업부·국토부의 기반 시설 확충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을 집중 지원
교육부	RISE	유·초·중·고·고등교육의 질, 산업 기반, 정주 여건 등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교육부	「인재 파이프라인」 정책	중소기업의 대학 교육과정 설계·운영 참여를 확대하여 졸업 후 중소기업 채용으로 연계
문체부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 조성	지역 수요를 반영해 법인 형태의 권역별 국립 미술관 설립 등 新운영모델 도입 추진('25년) 및 국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지방 이양(「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시행, '25년)으로 지역 자율성 제고
문체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을 넘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과기 정통부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지역에서 배출된 디지털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디지털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범 사업